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 확산 기초연구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 확산 기초연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 제출문 ■

본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12

■ 연구진 ■

연구책임	오단이(송실대학교)
------	------------

연 구 원	박종현(경남과학기술대학교)
	채성현(송실대학교)
	박종연(서울대학교)
	엄재선(SW복지재단)
	장윤선(SW복지재단)

요약

-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시민’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사회적경제 가치 확장가능성을 모색함
- 연구수행을 위해 시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경제사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정부(중앙정부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음. 또한 시민경제 구체화와 실천적 적용을 위한 사례를 분석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생활 및 지역기반의 시민에 의한(by citizen), 시민을 위한(for citizen) 경제로 정의되었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돌봄, 교육, 주거 등에 있어 시민주체성을 강조함
- ‘시민경제’ 틀 내에서의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 조직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공동체 지향, 연대, 협력 등의 가치와 운영원리가 근본이어야 할 것임

목차

1장 과업개요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과업내용	3
3. 추진체계 및 연구과정	4
1) 추진체계	4
2) 연구과정	5
2장 시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논의	11
1. 시민과 시민성	11
1) 시민	11
2) 시민성	12
2.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15
1) 시민사회	15
2) 사회적경제의 3섹터와 4섹터 논의	19
3. 사회적경제 개념 재구조화와 교육	23
1) 경제와 사회적경제 개념적 정의	23
2) 시민성을 기반한 사회적경제 교육	28

3장 경제사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양상과 역사적 맥락	31
1. 역사 속 시장의 양상들	31
1) 인간의 경제활동 및 사회통합의 유형들	31
2) 경제적 거래의 출현과 공동체 차원의 제도화	32
3) 원시·고대경제에서의 시장	33
4) 수도원의 경제적 활동과 상업사회의 도래	36
5) 상업혁명과 도시의 공동선 달성의 문제	38
6) 도시의 쇠락과 개인주의의 대두	43
7) 시장경제로의 전환	45
8) 브로델의 물질문명, 시장경제, 자본주의	47
2. 공동선의 달성과 인간 경제활동의 동기	50
1) 공동선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50
2) 스미스와 해방 공간으로의 시장의	53
3) 공리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전통으로의 귀결	55
4) 마르셀 모스와 자유방임주의 전통 비판	56
3. 시민경제 전통과 현재적 함의	60
1) 시민경제 전통	60
2) 현재적 함의	64

4장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방향 69

1. 국가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 69
2. 한국 사회적경제의 정책발전 71
 - 1) 제도화 과정 71
 - 2)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73
3.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77
 - 1) 서울사회적경제 활성화 2.0 77
 -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78

5장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 확장가능성 83

1.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FGI 결과 83
 - 1) 시민은 누구이고 시민경제는 무엇인가? 83
 - 2) 왜 시민경제인가? 86
 - 3) 시민경제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가능성 93
 - 4) 고려할 점 95
 - 5) FGI 결과 정리 100
2. 시민경제 구체화와 실천적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 101
 - 1) 시민경제 개념 정립과 연계되는 시민경제 주체 설정 기준 101
 - 2) 시민경제 개념 구체화를 위한 주요사례와 시사점 106

6장 결론	137
-------------	-----

< 표 차례 >

표 1-1 연구 추진체계도	4
표 2-1 시민의 변화 개념	12
표 4-1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75
표 4-2 한국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76
표 4-3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5대 과제 및 16개 사업	80
표 5-1 FGI 내용 정리	100
표 6-1 시민경제 사례연구 조직 구분	106
표 6-2 시민경제 사례연구 사례 별 핵심 특성 키워드	132

< 그림 차례 >

그림 1-1 서울특별시 지도	3
그림 2-1 한국사회 시민성 변화의 시대적 단계	14
그림 2-2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20
그림 2-3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20
그림 2-4 제4섹터 개념적 범위	22
그림 2-5 제3섹터 vs 제4섹터	22
그림 2-6 사회적경제 개념 층위	27
그림 4-1 한국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	73

01

과업개요

- 연구배경과 목적
- 과업내용
- 추진체계 및 연구과정

1 • 연구배경과 목적

- 경제는 생산, 소비, 분배, 재분배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생산, 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다수 연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및 정책지원 등에 포커스를 맞춰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간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 혹은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연대(solidarity)나 협력(cooperation)의 철학이나 가치와는 다르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5개년 액션플랜 : 서울 시민경제 정책 제안(2020)’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이 초기 재정지원 중심(2011년까지)에서 기업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원정책(사회적경제 활성화 1.0)으로 사회적경제가 양적성장(6년간 5배 증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도는 미비함
- 서울시는 그동안 공동체지향, 연대,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민 중심 사업(마을공동체활성화 등) 및 정책을 실행하였으나 서울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음

- 또한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창업(설립)과 같은 양적 확산에 몰두하다 보니 시민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국사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은 첫째, 시장경제와는 동기가 다른 경제적 의미로 둘째,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조직으로 셋째, 시민사회의 전략적 개입으로 보는 사회운동성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나 대다수 개념적 논의가 사회와 조직에 맞추고 있어 공동생산과 소비의 실질적 참여주체인 시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렇듯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논의에서 시민이라는 주체를 배제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시민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좋은 것은 알지만 어렵다고 느껴짐
-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시민’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위해 사회적경제 개념을 시민경제로 확장할 필요성 및 확장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2 • 과업내용

- 시민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검토
- 시민경제 개념 적용을 위한 실천적 적용방안
- 시간적 범위: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그림 1-1] 서울특별시 지도



출처 :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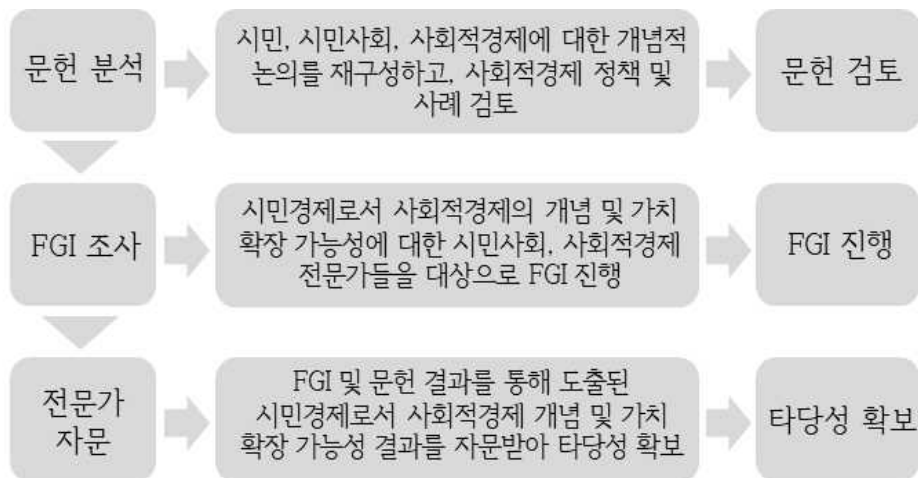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시민경제 개념 정립
 - 시민경제 개념 적용사례

3 • 추진체계 및 연구과정

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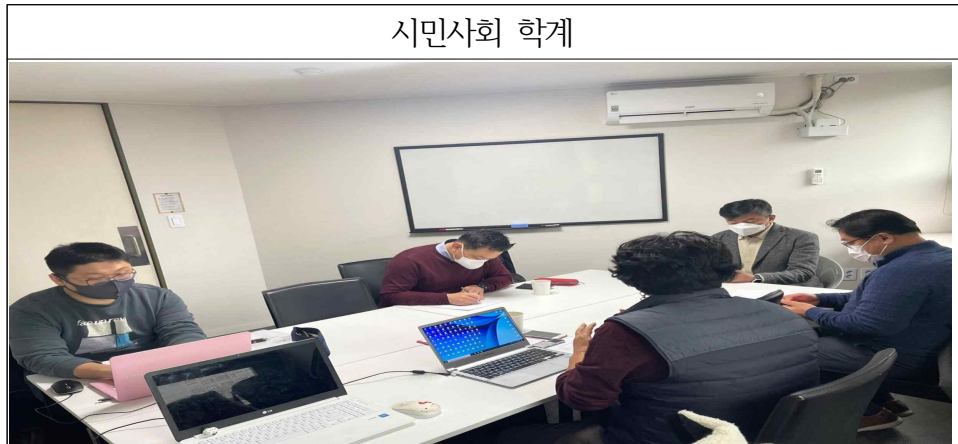
-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에 대한 확장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추진체계를 가짐
 - 문헌 분석 : 시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재구성하고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례 검토를 실시함
 - FGI 조사 :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가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후 결과를 도출함
 - 전문가 자문 : FGI 및 문헌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 확장 가능성 결과를 자문받아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 1-1] 연구 추진체계도



2) 연구과정

○ 1차 FGI



○ 장 소 : 상연재

○ 연구참여자 : 정상호교수(서원대), 오수길교수(고려사이버대), 윤창원교수(서울디지털대)

○ 2차 FGI



○ 장 소 : Zoom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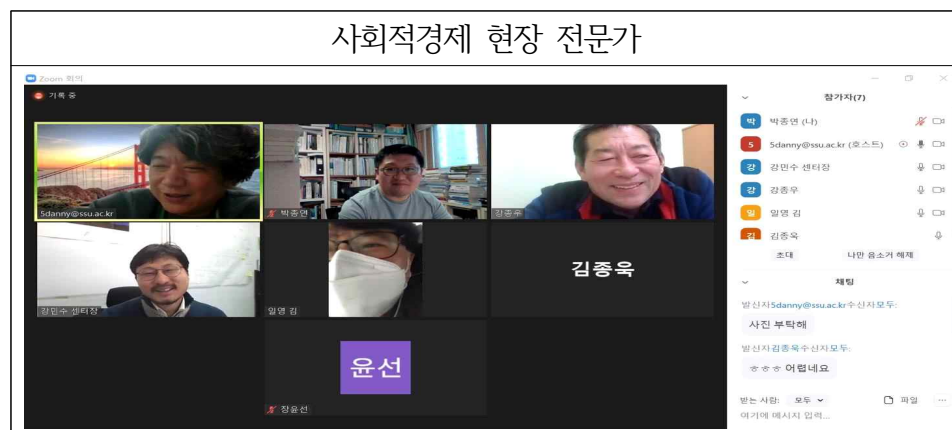
○ 연구참여자 : 안수진팀장(정책연구팀), 이재희과장(정책연구팀)

○ 3차 FGI



- 장 소 : Zoom 회의
- 연구참여자 : 전대욱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종석교수(강남대), 김형돈교수(대전대), 최준규박사(경기연구원)

○ 4차 FGI



- 장 소 : Zoom 회의
- 연구참여자 : 강종우센터장(제주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민수 센터장(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김종욱전무(사회적기업 웹와치), 김일영원장(사회적협동조합 사회혁신교육원)

○ 전문가 자문



○ 장 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연구참여자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주니어 모임

02

시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논의

1. 시민과 시민성
2.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3. 사회적경제 개념 재구조화와 교육

1 • 시민과 시민성

1) 시민

- 시민이라는 용어는 6세기 경 그리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고대 로마, 중세, 근대를 지나면서 의미가 변화됨
- 고대 그리스 사회의 도시국가에서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책임을 부여받은 자유민만을 시민으로 인정함. 즉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를 의미함
- 시민혁명기의 시민은 도시에서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람으로 재산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하였음
-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의 개념은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에 있었으나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면서 주체성을 가진 시민의 개념은 근대 시기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음
- 따라서 오늘날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내려짐

[표 2-1] 시민의 변화 개념

구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절대 왕정기	시민 혁명기
의미 · 활동	플리스의 구성원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남자·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	시민권(투표권, 공무 담임권)이 부여된 사람들로서 이방인도 시민권 행사 가능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절대 왕실의 지지 세력으로 봉건 영주에 대항	시민사회 형성의 주체·경제력 자유, 민주적인 사회제도, 정치 참여의 확대 요구
한계	특권 계급(외국인, 여자, 노예 배제)	특권 계급(여자, 노예 배제)	제3신분으로 왕과 귀족의 지배를 받음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됨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491&cid=47336&categoryId=47336>

- 정치적 관점에서 시민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치의 기본질서로 하는 특정한 정치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향유하는 개별 구성원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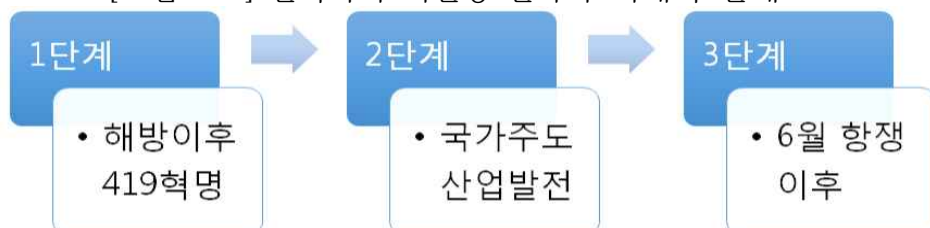
2) 시민성

- 한편, 시민성은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공동체주의자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교수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투표일뿐이라고 생각하는 다수결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이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동선(common good, 共同善)과 정의(justice, 正義)에 대해 심사숙고 하는 것’이며 시민적 삶(civic life)과 공적 숙고(public deliberation), 시민교육(civic education)에 달려 있다고 함

- 숙의가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잠재력은 바로 ‘시민성’ 개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임
- 이종일(2018)에 따르면, 근대 시민성의 변화는 로크와 홉스로부터 시작 되었는데 홉스는 국가와 개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계약’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과거 통치자와 국가를 나눌 수 없었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통치자와 분리된 ‘국가’를 주장하면서, 국가를 시민들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설정함. 이후 로크는 홉스의 계약 개념을 발전시켜 개인이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시민의 개념을 만들
- 2단계는 민족개념과 국가가 하나로 융합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공화정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민족 개념이 국가와 융합되어 혈연적 의미의 민족개념이 사회적 의미로 발전하였음. 이로 인해 근대국가는 국가와 민족 정체성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국가 밖의 사람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배타적 시민성을 형성함. 이러한 현상은 제국주의가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되어 이 시기에 시민은 동일성의 논리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절대왕정 국가의 신민(臣民)에 더 가까움
- 3단계는 20세기 초 중반 자본주의 발달로 국가 간의 이주나 이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로 이 시기에는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위협받게 되면서 주류집단의 가치에 동화되도록 하는 동화주의 시민성이 대두됨
- 4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들은 주류집단의 동화주의 시민성을 거부하면서 다문화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 시기에는 동화주의에서 차이의 정치를 주요 가치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서 비로소 동일성의 논리가 붕괴됨

- 5단계는 다문화주의 시민성이 포스트모던 철학과 만나는 시대로 동일성의 논리를 넘어서 차이를 정의(justice)로 인정하고 세계시민성 혹은 트랜스내셔널 시민성을 강조하기 시작함(박선영 외, 2020)
- 한국사회 시민성의 변화는 서구사회의 긴 발전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앞선 단계들이 변형되고 응축되어 발전함. 그 이유로 한국사회는 서구사회가 경험한 봉건국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한국전쟁, 남북분단과 대립, 국가주도 산업화 등을 경험하면서 매우 짧은 시기에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개인화의 과정을 경험함
-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나 민족의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면서 권리와 책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유에 기초한 시민성이 성장
- 첫 번째 단계는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이 발생했던 시기로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서 국가가 건설되던 시기임. 두 번째 단계는 1962년 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 국가주도의 산업체계를 받아서 국가가 발전되던 시기로 이 때 한국사회는 국가자본주의에 저항하여 민주성을 중심가치로 형성해 나감. 세 번째 단계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시기로 이 때 한국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시민성을 보장하게 됨(박상필, 2003; 박선영 외, 2020)


[그림 2-1] 한국사회 시민성 변화의 시대적 단계



2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1) 시민사회

-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로서,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이나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임
- 런던 정치경제대학(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시민사회센터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장을 이룬다.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가족, 시장의 경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다. 보통 시민사회는 다양한 공간, 행위자,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며, 형식성과 자율성, 권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선단체, 비정부 개발 기구, 공동체조직, 여성 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사회운동, 기업 집단, 연합 및 옹호 집단과 같은 조직을 아우른다."

-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시민에 대한 논의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멀게는 절대주의 왕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기반한 해방이라는 서구 정치사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남. 이후 시민사회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로크와 루소 등과 같은 계약론자들에 의해 계약관계로서의 시민사회이론과 헤겔, 마르크스 등과 같은 정치사상가들에 의해 시민사회를 계약관계가 아닌 국가라는 개념과 대비시켜 이해하는 시민사회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음(이창기, 2001)

(1) 계약론관점에서의 시민사회

- 사회계약론자들은 계몽주의 정치사상을 통해 절대왕정과 봉건적 신분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기인한 계약에 사회론의 필요에 따라 시민사회를 계약관계로 파악함. 계약론자인 로크와 루소는 시민정부와 거의 동의어로 다루면서 원시사회나 자연 상태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함
- 루소는 시민사회를 시민이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로 설명. 이 때 시민의 특징은 앞서 ‘시민’에 대한 논의에서 설명했듯이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경제적으로는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교육적으로 계몽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은 계층으로서 교양 있는 자유인이었음. 시민사회는 계몽주의사상을 학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층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민사회는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진보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진보사상은 학문적.경제적.정치적 진보를 지향함
- 로크는 정치 또는 시민사회를 세습적 권위 그리고 자연 상태와 대비시켜 설명. 로크는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사회현상 이전의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원시적 공동사회”로 설명함. 로크는 자연 상태를 설정하고 이 속에서 인간들은 소유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결국 이러한 자연 상태의 위험성에서 자신의 안전, 재산, 권리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합의에 의한 하나의 결사체로서 사회를 구성했다는 주장(이창기, 2001)

(2) 국가대비 시민사회

- 계약론자들의 관심은 사회의 생성(becoming)원리가 신이나 절대적 군주에 있지 않고 자유로운 개인들 간에 합리적 계약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설득시킨다는 점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국가 또는 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면이 빈약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시민사회는 국가와는 별도의 사회·경제적 제도이며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도나 간섭 없이 개개인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
- 헤겔은 시민사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된 개념으로서 보편적 원리에 기초한 국가와는 달리 시민사회는 인간들의 본능과 특수한 욕구에 근거하는 갈등의 마당으로 보았음. 시민사회는 갈등의 장(場)이기에 자기 해체적 성향을 지니므로 그것은 이성적 실체인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믿었으나 헤겔의 시민사회관은 서구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확대현실과 맞지 않음. 결국 자기 해체적 속성을 갖고 있는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은 민주적인 제도의 발전으로 오히려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확대발전을 가져옴
- 마르크스(Mark, K.)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명사회(civilised society)를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같다고 보고 헤겔을 따라 "시민사회(die bürgerliche Gesellschaft)"라고 부름
- 초기에 마르크스는 시민사회를 지양하는 주체로 국가를 본 헤겔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국가를 오히려 시민사회를 보존·강화 시키는 것으로 보았음. 그의 시민사회 논의는 근대 시민사회의 속성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시민혁명과 같은 정치적 혁명을 통해 모든 사회적 요소들이 국가로부터

터 분리되었으며, 정치적 해방은 사회가 정치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이기적 정신을 억제했던 정치적 멍에가 사라졌다고 봄

- 그러나 후기에 가서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시민사회를 자본주의사회와 같은 것으로 인식함. 따라서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시민사회는 비인간적이고 소외된 사회임. 왜냐하면 사유적 존재인 인간이 원자적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고 주체로서의 인간이 객체인 상품처럼 거래된다는 점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것임
- 마르크스는 시민사회의 해부가 정치·경제의 구조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모순이 응결된 것이 국가이고, “국가는 유산계급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며, 시민사회를 공산사회로 대체될 중간단계로 이해하면서 일차적으로 사회는 소외된 개인들로 분열되고 이차적으로 양대 계급으로 분열된다고 봄
- 한편, 시민사회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인 시민단체와 등치시켜 정부(국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의미인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혹은 시민사회단체라는 의미인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더 나아가 공공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발적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로 보는 관점도 존재함
- 시민사회(제3섹터 혹은 비영리섹터)는 19세기 후반부터 명확해졌으며, 살라몬(Salamon)교수는 미국의 비영리섹터가 중앙집권적 국가권위와 왕권과 같은 구세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미국인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형태로 초기에 성장했고 비영리조직은 당시 공적인 활동의 보완적 수단일 뿐 아니라 공공적 욕구를 실현하는 훌륭한 수단으로도 촉진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 비영리섹터의 확대는 비영리조직을 점점 지원하게 된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하게 연결되었지만 초기 반정부의 자세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었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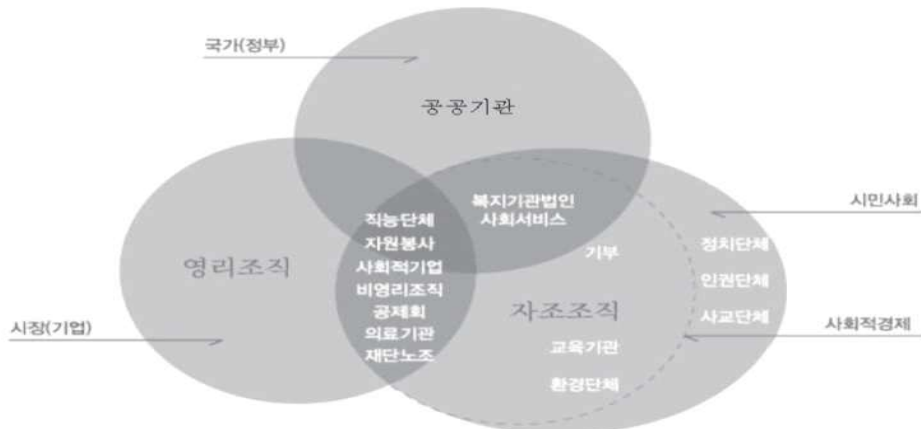
- 한국NGO학회 창립20주년 학술대회(2020)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시민 없는 시민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시민사회 운동은 과거와 달리 개인의 필요가 결합된 생활단위에서의 시민사회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됨

2) 사회적경제의 3섹터와 4섹터 논의

- 사회적경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는 제3섹터와 제4섹터 영역이라고 다양하게 불림. 제3섹터로 부르는 경우는 비영리성에 중점을 둔다면 제4섹터로 부르는 경우는 경제성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제1섹터는 정부(공공기관), 제2섹터는 시장(민간기업), 제3섹터는 1섹터와 2섹터에 속하지 않은 시민사회(NGO 혹은 NPO)를 일컫음
- 국제적으로 보면 제3섹터를 둘러싼 논의는 경제주체인 국가, 기업, 가계로 구분되거나 교환을 규제하는 원리나 방법인 시장, 재분배, 상호의존에 따라 규정됨(Laville, 1994). 또한 자원의 유형인 사업적, 비상업적, 비금융적으로 규정되기도 함(Defourny, 2001)
-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3섹터로 보는 관점은 사회적경제의 모태가 되는 영역이 시민사회 또는 제3섹터로 보고 있음. 영국의 정부조직인 제3섹터부에 따르면, “제3섹터의 조직들은 자신들의 가치에서 발생한 비정부조직이며 또 사회적, 환경적 또는 문화적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재정적 잉여금을 재투자하는 특성을 공유하며, 자원조직과 공동체조직,

자선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크고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한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제3섹터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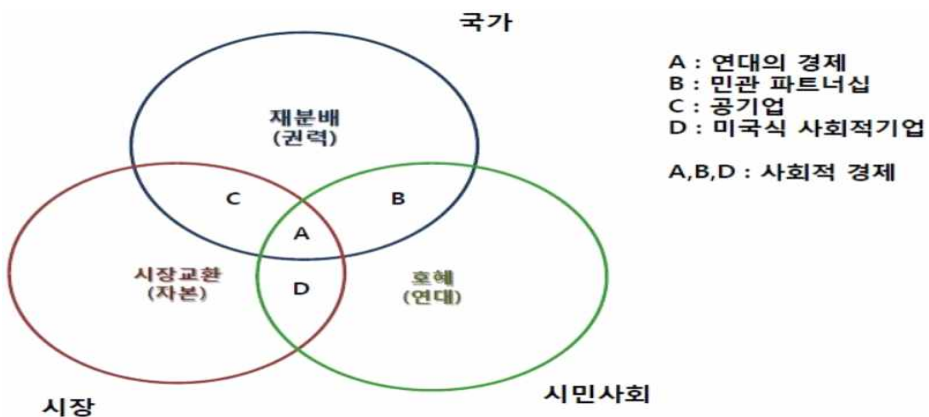
[그림 2-2]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출처 : 주성수 외(2013).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장을 위한 상생모델 개발. 자원봉사협의회.

- 또한 생협평론에서 장원봉(2011)은 사회적경제를 기본적인 축인 3섹터인 시민사회의 호혜를 기반한 연대로 놓고 1섹터인 국가의 권력을 통한 재분배와 2섹터인 시장의 자본을 통한 시장교환과 겹치는 부분을 연대의 경제, 민관파트너십, 미국식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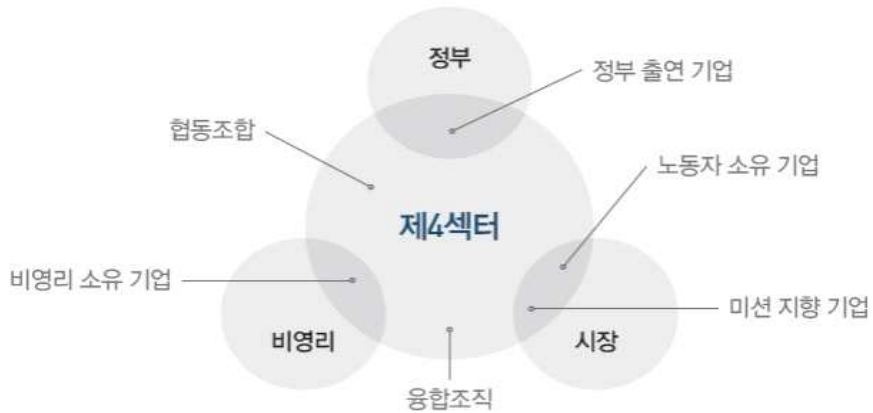
[그림 2-3]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출처 : 장원봉(2011).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생협평론 4호.

- 반면에, 사회적경제를 제4섹터라 보는 관점은 현대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경제성 그리고 혁신성에서 논의됨
- 이는 기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 가치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의미의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성이나 혁신성보다는 ‘사회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혁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논의임 (Defourny, 2000; Lipietz, 2001; 엄형식, 2008; 최용석, 백보현, 2020)
- 제4섹터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서 ‘공유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4섹터 구축 개념이 등장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함
- 제4섹터는 제3섹터의 지나친 정부 의존도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서비스 모형 동형화가 문제시 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혁신 주체에 대한 요구로 등장함(Meadows, 1972; Howaldt and Schwarz, 2010)
- 최준규(2018)에 따르면, 제4섹터는 개념적으로 기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이러한 조직은 가치 중심의 조직(For-Benefit Organization)으로 표현되며 몇 가지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한다고 주장함. 즉, 사회적 목적, 기업적 도구, 포용적 소유권,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공정한 보상, 합리적 수익, 사회적 환경적 책임, 투명성, 보호된 자산 등이 차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정부출연기업, 지역개발회사, 공동체 자산조직 등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소셜비즈니스, 기타 지속가능한 일반 기업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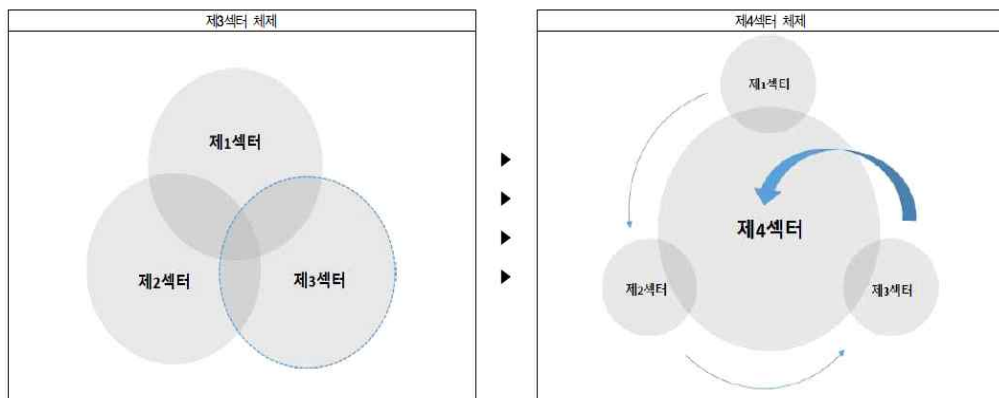
[그림 2-4] 제4섹터 개념적 범위



출처 : 최준규(2018). 사회혁신의 새로운 기반, 제4섹터

- 또한 제4섹터는 개념적으로 사회혁신의 필수요소인 사회적 가치기반의 사회성, 기술기반의 혁신성 그리고 생태계기반의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간 제1, 2, 3섹터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지고 있음(Kania and Kramer, 2011; 주성수, 2017)

[그림 2-5] 제3섹터 vs. 제4섹터



출처 : 최용석, 백보현(2020). 사회적 혁신 기반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 p.3.

-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 사회적경제는 제4섹터로 이해되다보니 살림살이의 경제관점이 아닌 돈벌이 경제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성과 시민성이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시민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경제 내·외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적 목소리가 들림. 전술한 시민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경제영역에게 큰 울림을 줌시민사회자성의 목소리와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시민사회 운동은 과거와 달리 개인의 필요가 결합된 생활단위에서의 시민사회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됨

3 • 사회적경제 개념 재구조화와 교육

1) 경제와 사회적경제 개념적 정의

- 경제는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 했던 유교의 백성을 위한 의식에서 기원함. 즉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한 세상을 다스리는 셈법이었으나 최근 들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만들고, 사용하고, 나누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됨.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백성의 안녕(well-being)이라는 지향은 없어지고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로 경제가 개인화 됨. 즉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품(재화)과 서비스(용역)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을 경제활동이라고 함
- 이는 경제활동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정의하였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효율성(efficiency) 혹은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관점에서 “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는 일”로 정의하기도 함
- 경제를 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과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오이코노미아(oikonomia)와 크레마티스틱케(khrematistike)로 구분한 살림살이로서의 경제와 돈벌이로서의 경제와 일맥상통함. 오이코노미아는 가정경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정이 경제적 자급자족의 기본단위로 보고 가정의 살림살이(house management)를 의미함

-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사회적경제를 앞서 논의한 2가지 경제관점 중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에 따라 상이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임
- 사회적경제는 1830년 프랑스 경제학자 샤를 뒤누아에(Charles Dunoy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지만(조우석, 2011; 신명호, 2013)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경제사상가인 샤를 지드(Charles Gide)가 연대 혹은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조직인 협동조합(co-operation) 공제조합, 결사체 등의 조직들을 사회적경제라고 규정한 것(신명호, 2009: 14; 김정원, 2013)이 현대적 의미¹⁾에 사회적경제에 더 가까움(신명호, 2013; 오단이, 2013)
- 한편,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의 대안적 성격과 관련된 ‘대안경제’ 담론 속에서 경제적 논리보다는 삶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경제, 호혜경제, 보살핌의 경제, 살림경제, 우애경제, 행복경제 등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주요섭, 2010), ‘다른경제’라고 부름
- 이러한 이름으로 사회적경제가 불리는 이유는 기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는 동기가 다른 경제, 즉 비이윤

1) 장원봉(2006)은 현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미를 크게 2가지 경향으로 보고 있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해방(emancipation) 가능성을 사회적경제에서 찾으려는 시도와 고용의 불안정성과 복지후퇴로 야기되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국가실패에 대한 보완자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추구적인 경제(non-profit economy)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 경제로 경쟁시장에서 탈락한 이를 돌보고 배려하는 이타적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이고,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공적경제를 의미하기도 함(임혁배 외, 2007)

- 앞서 논의한 경제에 대한 정의(definition)방식을 목적과 내용으로 사회적경제를 설명하면, 사회 구성원 또는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이윤배분의 사회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며, 생산의 최종 목적이 잉여 창출이 아닌 생산 또는 교환, 분배, 소비와 같은 살림살이로써의 경제활동을 본원으로 하는 호혜성과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로 정의할 수 있음(조우석, 2011; 홍경준, 2013)
- 유럽 사회적경제 연구자인 드푸르니(Defourny, 2001)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 구성원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목적, 독립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자의 우선권의 원칙들을 지닌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에 의해 수행된 경제활동”
- 다음으로는 경제활동이 아닌 경제활동 주체로써 이해하는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의 3개 범주로 인식되는 프랑스에서 유래된 방법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Defourny, 2001), 한국에서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더 나아가 소셜벤처까지 논의됨
- 이러한 사회적경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이 범유럽 차원의 사회적경제를 운동적 의제로 채택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 90년대 조사연구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association; 결사체) 등으로 이해되었으

나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위한 법적틀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개념의 범위에 이견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신명호, 2009)

-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명시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할지라도, 우리말의 사회적경제는 ‘경제영역’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됨(신명호, 2009). 이렇듯 경제활동영역과 경제활동주체인 조직형태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혼용되기 때문에 개념적인 경계가 모호한 것도 사실임
- 마지막으로는 생활 속에서 또는 삶의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협력, 연대와 같은 사회적경제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개인 혹은 조직의 생활 속에 묻어나는 것을 의미함. 예컨대 소비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글로벌 브랜드의 커피보다는 공정무역 브랜드의 커피를 선호하려는 노력 등과 같은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려는 노력 또는 이렇게 생활과 분리하지 않는 것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하기도 함(오단이 외, 2017)
- 이는 사회운동(social movement, social action)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으로 정의한 장원봉의 관점과 유사하나 사회적경제를 사회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에서의 운동성으로 보아도 될 것임
-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는 아래와 같음

■ 한국사회 사회적경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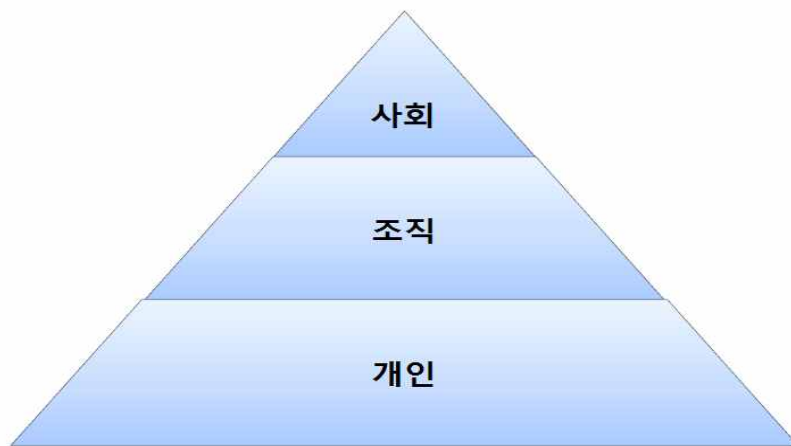
✓ 경제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

✓ 조직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

✓ 생활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

- 이렇듯 사회적경제 개념은 다차원적이며 다중적 의미를 가짐. 따라서 개인차원, 조직차원, 사회차원으로 사회적경제가 정의되는 방식이 오히려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견해가 존재함

[그림 2-6] 사회적경제 개념 층위



-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를 경제사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경제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관계 맺음으로 정의하고자 함

2) 시민성을 기반한 사회적경제 교육

- 서구사회에서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역사, 정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나타남. 즉 개인적 필요나 관점보다는 사회적 필요로부터 논의가 시작됨(박선영 외, 2020)
- 유럽에서의 시민성에 대한 가치와 요소는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추구와 평등, 법에 대한 존중,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추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사회 시민성의 기본요소인 사회적 도덕적 책무성, 사회참여, 정치문화, 민주주의와 정의(justice), 권리와 책임, 정체성과 다양성 등도 포함됨
- 한국사회 사회적경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은 대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교육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이나 창업에 대한 교육으로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시민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현실임
-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중학교 인증 교과서로 <사회적경제>를 만들어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회적경제 인식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즉 시민성을 함양하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기에 기대하고 있음. 이렇듯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의 등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중요성에 대한 교육 영역에서의 대응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입시 위주의 경쟁과 승자독식과 같은 비교육적인 삶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안내하고 다양한 진로를 상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음(김자옥 외, 2020)

03

경제사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양상과 역사적 맥락

1. 역사 속 시장의 양상들
2. 공동선의 달성과 인간 경제활동의 동기
3. 시민경제 전통과 현재적 함의

1 • 역사 속 시장의 양상들

1) 인간의 경제활동 및 사회통합의 유형들

- 인류가 삶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을 조직해 왔는가는 주로 인류학에 의해 해명되었음. 그중에서도 칼 폴라니는 말리노프스키나 투른발트 등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노동분업 및 사회통합의 형태로 교환, 호혜, 재분배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제자들과 함께 고대 왕국들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검토하였는바, 이들의 연구는 이후 다양한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되었음
- 재분배(redistribution)는 재화가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배분된다는 점에서 중심성의 원리가 관철되는 방식으로, 추장이나 가부장 등 권위를 가진 존재가 관습이나 각자의 역할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 자원의 배분을 주도함
- 호혜(reciprocity)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쌍방향의 대칭성 원리가 관철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유지나 사회적 인정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노동분업임

- 교환(exchange)은 사람들 사이에 각자의 이득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수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시장 원리가 관철되는 노동 분업 방식임. 마을에서 지역민들의 필요와 해당 지역의 생산조건을 반영해 사회적 규범의 지배를 받으며 작동했던 마을장터, 먼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원격지 무역,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전국적 시장 등 여러 유형으로 다시 세분됨
- 가정경제(householding)는 집단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는 원리로서, 이익이나 돈벌이를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사용이나 살림살이를 위한 경제활동을 의미함
 - 가정경제 개념은 1944년 발간된 <거대한 전환>에서는 돈벌이를 위한 경제(크레마티스틱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음. 이 책에서는 돈벌이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사용을 위한 생산이자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로서의 '가정경제' 또는 '살림살이의 경제'(오이코노미아)가 되었음. 반면, 1977년 발간된 <인간의 살림살이>에서는 가정경제를 뛰어넘어 폴리스 공동체 차원의 통합원리인 우애에 주목하면서 이를 호혜로 지칭했음 (Polanyi, 1977)

2) 경제적 거래의 출현과 공동체 차원의 제도화

- 폴라니는 인류가 부족사회로부터 고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거래가 출현했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가능성을 지님과 동시에 공동체의 연대나 사회정의를 깨뜨릴 위험도 함께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경제적 거래 및 개인적 자유라는 축과 공동체적 연대 및 사회정의라는 축 사이의 긴장과 공존을 인간의 살림살이가 마주하는 근원적 문제로 제시했음. 경제적 거래 및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적 연대 및 정의의 조화를 이룰 해법을 놓고 다양한 역사적 경로가 출현했는데, 크게 보자면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진 소농사회의 거래적 경로와 대규모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진 관개형 제국의 처분적 경로로 나뉘어짐(Polanyi, 1977; 이병천, 2017)

- 경제적 거래와 공동체적 연대 및 정의가 긴장을 내포하면서 서로 접합되는 구체적 과정들 속에서 교역·화폐·시장의 다양한 양상이 발생했는데, 폴라니와 그의 제자들은 이 교역·화폐·시장의 제도화 양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음
 - 이들은 교역·화폐·시장을 단일한 패키지로 이해하는 '삼위일체' 신화에 도전했는데, 그 핵심은 △ 교역·화폐·시장은 별개의 역사적 기원을 갖는다는 것 △ 이들의 발전이 공동체 내부인지 아니면 외부인지가 중요한데 대체로 공동체 외부의 대외적 발전이 우선했다는 것 △ 교역·화폐·시장은 호혜와 재분배와 같은 비시장경제적 방식에 의해 통합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폴라니는 교역과 화폐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이들 두 요소들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통념을 비판했음. 즉, 교역이 증여교역 및 관리교역과 같이 시장에 기초하지 않은 교역과 시장에 기초한 교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밝혔고, 화폐 또한 다양한 용도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했으며, 시장사회의 화폐가 '전목적적 화폐'인 것과 달리, 비시장사회의 화폐는 '특정목적 화폐'였음도 해명하였음

3) 원시·고대경제에서의 시장

- 원시·고대경제와 관련해서는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티브족(Tiv)과 고대 아테네 경제의 두 가지 사례를 검토하기로 함. 티브족 사례를 통해서도 경제에 별개의 '교환 영역들'이 존재하며, 그 이유가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확인할 것임. 고대 아테네 경제의 사례를 통해서
재분배, 호혜, 시장 교환이 “유기적 전체” 속에 효과적으로 녹아들 수
있음을 확인할 것임

- 폴 보해넌과 로라 보해넌의 관찰에 따르면, 티브족에는 시장은 있었지만, 창살이 가로내려진 우리 속의 시장이었음. 이들의 시장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역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불평등한 권력과 경제력과 폭력으로의 가파른 비탈길을 막기 위해 구조화된 제도였음.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 경제는 사회 내 상이한 영역 속으로 분리되었으며, 교환은 특정 영역을 벗어나서까지 행해질 수는 없었음 (Haan & Hart, 2012; Acemoglu & Robinson, 2019)
 - 가장 유연한 영역은 닭·염소·양·밥그릇·절구·숫돌·조롱박·항아리·바구니 등 식량이나 생필품을 위한 시장이었음. 이들 물품들은 주기적으로 열리는 지역 장터에서 판매되었고, 가격은 흥정을 통해 유연하게 결정되었음
 - 한편, 소·말·흰옷·약품·마법물품·놋쇠막대·노예 등 위세품(*prestige goods*)은 원거리교역과 관련된 것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거래되었음. 이는 구리막대와 같은 별도의 화폐에 의해 공동체의 원로나 연장자들이 관리되었으며, 가격은 관습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음.
 - 범용 화폐가 없으므로 두 방향으로의 이동은 수월치 않았음. 그러나 범용화폐가 등장하면서 누구든 원로나 연장자에 개의치 않고 원하는 것을 적은 양으로 사는 게 가능해졌는데, 이는 근대적 화폐가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흔들어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함
 - 티브족의 사례는 시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물교환 성향을 반영하는 마을장터에서 출발하고, 사람들 사이의 교환이 활발해지면 결국에는 원거리무역으로 이어진다는 주류경제학의 통념과 달리, 마을장터와 원거리무역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별개의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시장

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시장의 원형이 마을장터라는 주장은 뿌리가 깊음. 이 믿음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진열하고 그 물건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자발적으로 상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흥정하는 그림이 담겨 있음
 - 그러나 인류학의 연구성과들을 보면, 시장의 원형이나 상거래의 기원에는 두 지역의 사냥꾼들이 중간에서 만나서 다른 영토의 사냥감들을 교환하는 그림이 더 부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 시대 상거래를 보면, 호박·조개·동·흑요석 등 각 지역의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특산물들을 중심으로 교환이 이뤄졌음(Jacobs 1992). 다만 이러한 거래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과는 차단된 채 이뤄졌다는 점도 같이 인식될 필요가 있음
- 폴라니에 따르면, 재분배와 시장교환을 최고 수준까지 발전시켜 곡물을 조달한 대표적인 지역이 고대 그리스로, 그리스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메소포타미아와는 대조적인 진화 경로를 밟았음(Haas & Hart, 2012)
 - 고대 그리스 경제는 토지의 통제력에 기초를 둔 귀족과 해상무역에 기초를 도시민들의 갈등과 타협 속에서 성장. 폴라니에 따르면, 아테네의 민주주의 폴리스는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 대해 규율을 행사했으며 개인들에 대해서도 규율을 행사했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자유의 부정이 결코 아니었으며, 폴리스와 그 법률은 개인적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정의와 도덕성의 제도적 체현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함
- 폴라니는 아테네의 폴리스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의 중앙화된 계획

이 관료제 없이도 집행되고 효과를 거두도록 했으며, 시민들의 군사적·정치적 서비스에 대해 화폐로 그 댓가를 지불토록 함으로써 식량시장의 발전을 자극한다는 점에 주목(Dale, 2015)

- 이를 통해 아테네 민주주의는 도시의 재분배가 화폐 지불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관료주의에 의존할 필요도 없애고 시장의 힘이 사회적·정치적 구조의 한계를 파괴할 위험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임

4) 수도원의 경제적 활동과 상업사회의 도래

- ‘시민경제’의 뿌리는 중세의 수도원으로 소급 가능함. 근세의 시장 및 도시의 성장과 관련해 수도원이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큼.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던 시기, 수도원은 야만으로의 회귀를 막으며 시민성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했으며, 적절한 회계와 경영이 요구되는 최초의 복합적 경제구조이기도 했음. 수도사의 생활은 모든 세부사항까지 구원을 위해 조직되고 수행되었는데, 이 같은 생활방식은 근대 서양사회를 대표하는 ‘도구적 합리성’을 낳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Zamagni & Bruni, 2004)
-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묵상과 노동을 삶의 핵심 활동으로 설정하고 별 목·경작·농업·목축 등을 열심히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원은 생산의 중심지뿐 아니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음
- 이때 수도사들에게 실존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수도원 운영을 위해 수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자애’와 ‘욕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부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음(Zamagni, 2009)
- 시토회 수도원장이었던 리보의 엘레두스의 대답은 ‘부를 사랑하는 사

람'과 '부를 소유하지만 부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부를 유통시키고 다른 이들을 자기 재산 축적에 참여하게 하는 '탐욕을 거부하는 자'들이 될 것을 권고했음. 이러한 주장은 4세기의 교부 바실리우스의 견해를 되살린 것인데, 그가 쓴 <부의 선한 사용>이라는 저서에는 “자주 퍼내는 우물에서 물은 더 쉽게 더 많이 나온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우물은 썩어버린다. 부도 마찬가지로 멈춰 있으면 쓸모없어진다. 반대로 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통되고 흘러가면 모두가 공동으로 풍성한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음

- 수도사들이 지향한 '이상적인 도시'와 수도원의 벽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인간들의 도시' 사이에는 교류가 일찍부터 행해졌으며, 일정한 긴장관계도 존재함. 수도원은 현실의 도시 밖 이상적 도시로서 수도사들의 체험을 토대로 속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총체적 행동 규범을 사회적 안전망도 같이 제공함. 이 과정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속세인, 특히 상인들에게는 상거래를 촉진하고 돈벌이에도 충실하되, 벌어들인 돈은 수도원에 기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음 (Zamagni & Bruni, 2004)
- 이러한 수도원 생활의 경험 속에서는 자선과 경제, 증여와 계약이 단단히 결합되었으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증여와 상호성, 공동체성 위에서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시장이 떨어져 나왔고, 시장경제가 새롭게 탄생. 이때, 시장경제의 탄생과 관련해 “계약문화가 증여문화를 몰아내며 등장하고 호혜성이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등장했다”는 막스 베버 전통의 시각과 “시장경제의 기원은 호혜의 문화의 발전 속에 있었으며, 양자는 19세기 초반까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시민경제론의 시각이 대립함

5) 상업혁명과 도시의 공동선 달성의 문제(Zamagni, 2009)

- 11세기와 14세기 사이에 유럽은 사회와 경제에서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됨. 토양의 간척 및 개간·도로 정비·기술 혁신 등에 힘입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촌 사회가 변화·발전했으며, 상업혁명이 본격화됨. 이러한 상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함
 - 첫 번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체 규모가 점차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임. 수백 명 단위였던 이주민이 수천 명 단위로 바뀌었고,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직접 얼굴을 맞대던 관계가 ‘낯선’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고, 농노가 영주에게 노동을 통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가 금납지대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탈인격화 문제는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신뢰 문제로 이어졌음
 - 두 번째 결과는 화폐의 유통임. 화폐 유통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발전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정비된 경제 구조 안에서 농민과 장인들이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될 기회를 얻었음을 의미함. 화폐 경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에 합당한 비용을 책정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해주고, 결국 농노제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데도 효과적이었음
 - 셋째,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외 수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음. 특히 상업 거래에서 화폐 사용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낯선’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화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역 수단이 되었고, 부의 축적수단으로서도 유용했기에 인구의 도시 집중에도 영향을 미쳤음

- 상업혁명이 출현하는 몇 백년의 장기적 기간 동안 상업을 윤리적·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음
 - 중세의 도덕률은 반상업적이었으며 상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보였음. 교황 레오 1세(재위 440~461)는 매매 행위에서 죄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상업에 종사하는 삶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음
 - 이처럼 억압적인 중세의 상황에서도 상인들은 카롤링거 왕조(750~887 서유럽을 통치한 프랑크 왕조) 이후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며, 개인의 상상력과 능력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할 자유를 주창하며, 농업과 농촌 중심의 경제를 상업과 도시 중심의 경제로 서서히 변화시켰음. 이러한 흐름에 맞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은 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고리대금업을 규탄하고 탐욕을 가장 나쁜 악덕으로 지목했는데, 이는 상업혁명의 전개가 개인의 자유나 욕망의 추구 행위를 이끌어내면서 당대의 지배적인 사회질서를 위협했음을 의미함
- 과거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경제체제가 등장했고 불필요한 욕망을 인정하는 순간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음. 필수적인 욕구만을 인정하는 경제만이 기존의 질서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었고, 개인과 공동체의 통합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음. 그러나 과거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경제체제가 등장했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강요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사회질서의 안정을 다시 확보할 새로운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후기 스콜라철학,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몫이 되었음
-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경제학 문제들을 “우리가 신에게 다가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 보았고, 물질적인 재화의 가치는 인간의 진면목(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다.)이 활짝 피어나도록 덕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 이때, 물질적 재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덕을 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물질적 재화나 부는 덕의 추구라는 점에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선택이 됨

- 아퀴나스는 또한 소득이나 부를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자기 신분에 걸맞은 필수품을 얻는 데 소용되는 본질적 부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에도 걸맞지 않고 덕행에도 불필요한 ‘넘치는’ 부임

-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사회에 미덕이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상인이라고 할 수 있음. 상업이 지나치게 번성하면,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자라게 되고, 도시의 삶도 타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임

- 상업혁명을 기점으로 유럽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했음. 도시는 자유 시민들의 공동체였고,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 및 기구들과 더불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도시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외부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보여주는 다양한 공간들이 세워졌음

- 고대 그리스의 광장을 염두에 둔 중앙 광장, 대성당, 총독 관저, 상인들과 상회를 위한 건물, 계약과 교역의 장소인 시장, 부유한 유산 계급의 저택, 평신도가 묵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만들어졌고, 전형적인 시민사회를 규정하는 덕성이 계발되었는데, 상호 신뢰, 형제애, 이타성에 대한 존중, 협동 형태의 경쟁 등을 들 수 있음

- 이렇게 생겨난 도시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자율성을 표방했고, 수공업자 및 상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길드가 조직됨으로써 사회·경제적 결속이 커졌음. 이들 조직은 도제-직인-장인 등의 노동체계를 수립하고 품질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직종의 단결력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으며, 교역 및 정보 수집의 기반이 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도 했음
 - 특히 도시의 상인들에게는 먼 거리에 떨어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이 기대되었는데, 새로운 시장에 나가 생산품을 팔고 원재료를 구매함과 동시에 흥미로운 것들을 보고 와 새로운 혁신의 기풍을 전파하기도 했음. 이처럼 상인들은 상업 분야에서 조직적인 개혁을 시도한 적극적인 생산자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개방의 적극적인 주체이기도 했음
- 이처럼 중세 말의 도시는 완전히 자연 발생적이면서도 새로운 사회질서의 모델이었는데, 이들 도시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고, 먼저 마련된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음
-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상호 신뢰와 신용이었음. 그런데 당시 도시는 실력과 노력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며 적극적으로 공동선을 이루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탐욕가·무책임한 생산자·게으른 사람·불로소득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이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대의 사회에서 공동선 등의 개념이 어떻게 공유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사상에 따르면, 공동선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개인들의 관계에

서 만들어지는 재물이나 부도 공동선임. 이러한 공동선 안에서는 각자가 공동체로부터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 생기는 유익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각자의 이익은 다른 이들의 이익과 대립하지 않고 함께 실현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믿음임

-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신학자인 피에트로 디 조반니 올리비(1247경~1298)은 계약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은 모든 이의 공동선이며, 공정한 가격 역시 공동선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고, 가격은 공동선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시장이나 상업 등 경제적 문제도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함
 - 가치의 평가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 공동선은 사유 재산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입장을 전제로 올리비는 시장 자체도 ‘공동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음. 이때 시장을 ‘공동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을 단순한 교역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상업의 의미 또한 단순히 차익을 얻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해 인간관계를 낳고 상호 신뢰를 키워나가는 활동으로 인식이 전환이 이뤄짐
 - 올리비의 상품 가격 산정 이론이 현실화되면서 상인의 기능 또한 재평가되었음. 어떤 물건을 산 뒤 어떠한 가공이나 개선도 없이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이 죄이지만, 신뢰의 추가나 위험 감수나 공익적 판단 등이 더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음
 - 올리비의 논의를 기점으로, 상업적 ‘이윤’은 탐욕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옛 사고방식이 물러나고, ‘적절한 한계’를 지키는 공정한 상

인은 공동체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음. 이때 상인은 돈 될 것을 예측해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임

- 프란치스코 학파의 이러한 이론에 힘입어 피렌체나 볼로냐 등 유럽의 도시들은 스스로를 공동선의 구현자로서 인식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번영과 안정을 구가하는 시민 인본주의(Civic Humanism)의 시대를 누렸음

6) 도시의 쇠락과 근대 개인주의의 대두

- 그러나 시민 인본주의의 시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 도시들은 쇠락하기 시작했으며, 중요한 유럽 시장을 잃어갔고, 식민지 확보를 위한 경쟁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기술적인 혁신성도 상실했는데, 소득분배의 양극화, 길드의 폐쇄성, 도시들 사이의 지나친 분쟁, 토지기반 귀족들의 반격 등이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었음(Zamagni, 2009)
- 이에 따라 예술은 더 이상 이상적 도시와 정부의 사람들을 그리는 대신, 시민의 현실적 삶과는 유리된 신화 속 신들을 그려서 민간의 예배당과 침실을 꾸미게 되었고, 16세기 말 17세기 초, 시민적 행복에 대한 인본주의의 야심은 시들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토마소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아틀란티스>와 같은 유토피아 저작들이 등장했음
- 이들의 저술은 이상적인 인간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시민 인본주의보다는 근대적 개인주의에 가까웠음.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군주정의 복귀 등으로 시민적 성취가 무너져버린 가혹한 정치현실에 대한 환멸과 회의 속에서, 타락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수단으로 극단적 개인주의가 주목을 받았던 것임

- 그리고 시민 행정의 영역에서 상업과 수공업의 활동이 내쳐졌고, 시민에 대한 정의에도 변화가 일어났음. 즉, 시민은 경제 활동이나 시민적 활동에 전념하는 유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공예에도 종사하지 않고 사적 수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음. 이제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이를 시민의 중요한 덕행으로 이해하는 시민 인본주의의 발상은 사라지고, 덕행이나 명예는 정치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으며, 경제는 상이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음(Zamagni & Bruni, 2004)
- 시민 인본주의의 잿더미에서 개인이 되살아나면서, 공동선에 대한 관심도 약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 탐험의 결과로 상업이 다시 확산되었고, 지역과 국가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하락했음. 이 과정에서 시장이나 농촌이 아닌 공장 출신의 자본가 계층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태도가 종교적으로면죄부를 얻고 오히려 신의 구원을 받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까지 인정을 받게 되었음(Zamagni, 2009)
-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16세기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장 칼뱅(1509-1564)임. 그는 탐욕이 대죄였던 세상에서 물질적 부의 추구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사업적 성공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신중하고 절제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이자, 신이 준 소명을 다한 결과라는 논리를 제시했음. 칼뱅을 기점으로, 사업은 어두운 구석에서 행해지던 은밀한 활동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송받고 구원으로까지 이어지

는 영광스런 활동으로 그 위상이 변화했으며, 더많은 이윤의 추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할 만한 행위로 바뀌게 되었음(Rajan, 2019)

7) 시장경제로의 전환(Polanyi, 1944)

- 칼 폴라니(1886~1964)도 다른 많은 역사학자나 인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태고 이래 인류와 함께 존재했지만,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부분적 역할만을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함. 폴라니는 수천 년 동안 사회 속에 파묻혀 있고, 공동체의 규범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던 시장이 19세기를 전후로 그 영향력이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며 시장이나 경제의 모습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대한 변형’ 과정을 분석하기도 했음. 그가 분석한 과정들의 핵심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물물교역이나 교환 원리는 시장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지만 결코 시장 외의 형태를 없애가면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음. 특히 토지와 노동의 경우가 중요한데, 봉건제 및 길드 체제에서는 토지 및 노동이 사회 조직 자체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상품화는 크게 제약되었음
 - 토지는 봉건 질서의 중추적인 요소로서 군사, 법률, 행정, 정치 체제의 바탕을 이루었으며, 그 지위와 기능은 법률과 관습의 규칙들이 결정했음. 토지 소유의 이전 여부, 이전을 가능케 할 제약조건들, 소유권에 포함되는 내용들, 토지의 사용 가능한 용도 등 모든 사안은 자유로운 수요·공급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 및 제도에 의해 결정되었음
 - 노동 조직도 마찬가지였음. 길드 체제에서는 생산 활동의 동기나 환경이 사회의 일반적인 조직에 묻어 들어가 있었음. 장인과 도제

의 관계, 생산 기술 관련 조건, 도제의 수, 임금 등이 모두 길드 및 도시의 관습과 규칙의 규제를 받았음

- 중상주의는 상업화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노동의 상업적 거래를 막고 있던 보호 장치들은 건드리지 않았음

○ 폴라니는 19세기를 기점으로 이제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시장과 경제가 출현하는데, 그 핵심이 지금까지 보호되었던 토지와 노동 그리고 화폐의 상품화에 있다고 주장함

- 1834년의 악명 높은 구빈법 개혁으로 빈민들에게 임시로 베풀었던 식량 배급마저 폐지해 빈민들로 하여금 굶주림과 노동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쟁적이고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시장을 창출했음. 1844년에는 은행조례를 통해 금본위제를 확립함으로써 통화의 공급에서의 정부의 영향력을 제거했음. 그리고 토지법 개혁을 통해 토지는 가동성을 갖는 자산이 되었음
- 이렇게 하여 노동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화폐는 자기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공급되어야 하며, 상품들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자유로이 이동해야 한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세 가지 교리가 확립되었음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고립되어 있던 여러 시장들이 관계를 맺어 자기 조정 체계를 이루었고, 원래 해롭지 않았던 시장이라는 경제 형태가 엄청난 규모로 팽창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졌음

- 과거에는 시장은 가정경제에서 남아도는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장치였고 생산자에게 넉넉한 소득을 제공하지도 못했음. 하지만 이제 시장은 생산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며,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한 생산자들에게는 엄청난

난 소득을 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처럼 시장이 국가에 의해 사회적 규범이나 주변 환경들로부터 풀려나고 상품시장·노동시장·토지시장·화폐시장 등 각종 시장이 긴밀히 연결되며 경제 전반이 시장화되는 ‘시장경제’가 본격화되면, ‘시장법칙’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시장사회’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출현함
 - 이러한 사회에서는 경제가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자기조정 시장 맡겨지며, 인간의 일상적 활동과 자연자원도 통제함
- 폴라니에 의하면, 경제를 사회로부터 뿌리뽑고 시장원리를 경제통합의 지배적 형태로 격상시키는 ‘유토피아적’ 시도는 엄청난 물질적 부를 창출하기는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상품화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자연과 인간과 사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기 때문임

8) 브로델의 물질문명, 시장경제, 자본주의

- 시장의 출현 및 자본주의의 형성과 관련해 물물교환에서 시장이 출현하고 이러한 시장들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했다는 식의 진화적 인과관계가 시장과 자본주의에 관한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역사적 현실에 비춰 볼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학자가 페르낭 브로델인 바, 시장과 자본주의에 관한 그의 탁견을 살펴보기로 함 (Braudel, 1985; 김홍식, 2012)
- 브로델은 인간의 경제적 삶이 물질생활-시장경제-자본주의의 세 층

으로 겹쳐져서 영위된다고 이해함

- 물질생활은 유구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일상적 습관처럼 되어버린 삶의 요소들이자 우리의 삶을 밑바탕에서 규정하는 공통의 요소들로, 물질문명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그런 맥락임. 인간이 가족이나 마을 단위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느냐 교환하며 사느냐는 기준에서 보면, '물질생활'은 자급자족에 가까운 사용가치의 세계이며, 교환가치의 문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가 시작됨
- 1층의 물질생활이 1층의 경제로 이어지는 접점들에는 소소한 생활재를 주고받는 마을장터·좌판·상점들임. 2층의 시장경제는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에 경쟁의 힘이 작용하고, 수요와 공급과 가격이 대체로 행위자들의 예상대로 움직여서 이익도 일정하며,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행위자들이 대체로 잘 아는 투명한 영역임
- 시장경제가 이처럼 투명했던 것은 시장 참여자들을 규제하는 법규가 애초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참여자들이 그 규칙을 기꺼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규범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그 참여자들이 고만고만한 행위자들로 이를 위반할 정도의 특출한 권력을 지닌 존재도 아니었기 때문임
- 이러한 시장경제에서는 서로 다른 여러 품목 혹은 산업의 시장들이 횡으로 퍼져서 서로 교류하고 흥정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항상 작동하며, 따라서 수요와 공급과 가격이 일정 정도 자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 읍 단위의 소소한 장이라든가, 도시권의 정기시나 상점, 행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층의 시장경제에 속한 행위자들이며, 또한 거래 규모가 큰 국제무역이더라도 북유럽의 단치히에서 남유럽으로 수

출하는 곡물이라든가,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향하는 포도주나 올리브기름처럼 오랫동안 일상화된 거래일 경우에는 시장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음

- 자본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3층에서는 시장경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교환의 영역이 펼쳐지는데, 이 상층 영역에서는 소수의 '덩치 큰 선수들'이 영악한 술수와 힘을 휘두르며 법규와 규범을 우회하거나 무시하고 높은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음. 교환의 이러한 상층부인 자본주의는 반(反)시장으로 지칭되는데, 경쟁과 규범이 아니라 독점과 지배가 힘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임
 -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존재했는데, 소매거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상들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과 인도, 중국 등지를 오가며 거래하는 원거리 무역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음
 - 이때, 거상들이 행사하는 경제적 힘의 원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의 관계를 끊어놓음으로써 가격을 조정하고 높은 이윤을 챙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과 신용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임
- '반시장'의 영역에서 행동하는 거상, 즉 상인 자본가들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첫째, 군주와 가까운 사이로, 국가에 협조하고 국가를 이용하는 존재임. 둘째,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을 함. 셋째, 그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활용해 규칙을 능수능란하게 왜곡함. 넷째, 지식·정보·문화 면에서 누리는 우위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값나가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들여 장악하며 독점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대추구 행위를 벌임. 다섯째, 높은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라면 닥치는 대로 뛰어들었고, 전문화하지 않았음

2 • 공동선의 달성과 인간 경제활동의 동기

1) 공동선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 공동선(common goods)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는 도덕철학, 사회과학, 경제학의 근본 문제임. 이때, 공동선이란 나와 너, 곧 우리 모두의 좋음이 커지거나, 전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신의 이익추구 본능이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공동선의 달성에 나서도록 할지, 공동선의 달성은 사익 추구하고 어떻게 양립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짐 (Bruni, 2012)
 - 우선,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이라며, 무리를 이루며 공동생활을 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의 파이를 키우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각시킴. 이때,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더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도 고려할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학습·습관·도덕·규범 등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본능을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됨
 -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등 기독교 전통에서는 시민들의 자비심(benevolence)이 공동선의 기초라며, 자신에게 좋은 것들 중 일부를 타인과 공동선과 신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려 한다는, 행동의 의도성(intentionality)을 강조함
 - 이들 두 전통은 윤리나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협력이나 자비심 등 좋은 태도나 성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한편, 인간에게는 서로 협력하려는 사회적인 본성이 아니라 상대

를 짓밟거나 지배하려는 반사회적인 본성이 더 크기 때문에, 도덕에의 호소를 통해서도 공동선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나 토마스 홉스(1588~1679)가 이 전통에 속함. 홉스는 사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두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으로 공멸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종식시킬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물리력이 바로 리바이어던(Leviathan), 곧 국가이고, 이러한 근대국가의 등장 속에서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민사회도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Bruni(2012)를 필두로 하는 이탈리아 시민경제 전통에 따르면, 근대 사회 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공선 달성 문제를 해명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애덤 스미스(1723~1790)임
 - 스미스의 인본주의는 시장에 근거한 독립적 개인을 강조하며, “의도적인 자비심(intentional benevolence)이 없이는 공동선도 있을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아퀴나스 전통의 오랜 믿음을 뒤집어서, “공동선은 각자의 사적인 선이나 사적 이익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행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라는 주장을 펼침
 - 각자가 가진 것을 시장(市場, market)에서 교환하도록 한다면, 내 관심사가 아니라 타인의 관심사에 주목하고 타인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이익도 높여주고 결국 사회 전체의 공동선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부론>의 핵심 논리인 것임(Smith, 1776)
 - 이러한 입장은 인류를 야만에서 문명으로 전환시켜주는 데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몽테스키외(1689-1755)의 ‘부드러운 상업’(doux-commerce) 흐름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공동선을 가능케 하는 인간 내면의 실체는 도덕감정(moral sentiments)이며, 그 핵심은 동감이라는 것이 <도덕감정론>의 핵심 문제의식임(Smith, 1759)
- 애덤 스미스가 바라보는 인간은 자기이익을 추구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불편부당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보이는 동감(sympathy)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까지 자기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 존재임.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도록 태어났지만, 동감으로 인해 타인의 고통과 행복에 대한 관심도 지니고 있는데, 타인의 고통을 보면 같이 고통을 느끼고 타인의 즐거움을 보면 같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 동감의 핵심임
- 동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걱정들과 함께 하는 느낌들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행동원리로, 타인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와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 또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한 상상을 통해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임. 인간은 타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보는 즉시, 혹은 상황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한 상상을 통하여, 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임
- 스미스에 의하면, 상호동감의 즐거움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감정과 동일한 이웃의 동감(fellow-feeling)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고, 그 반대로 이웃의 동감의 부재를 느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음
- 스미스는 불편부당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인애(仁愛: beneficence)의 덕’이라고 지칭하는데, 인애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베품 행위이므로,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보복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음. 인애에는 수혜자는 있으나 피해자가 없기 때문임. 한편, 시장에서의 공동선 실현과 관

련해 스미스가 훨씬 강조하는 것은 불편부당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동기가 제한·억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정의(正義:justice)의 덕’임(박세일, 2015)

2) 스미스와 해방 공간으로서의 시장

- Bruni(2012)에 의하면, 스미스는 시장의 중개에 의존하는 사회, 시장의 중개를 통해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된 사회를 꿈꿨다고 함. 중개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 관계는 야만적·봉건적·비대칭적·수직적 관계와 동의어라고 믿었으며, 시장이 가문·가족·우정과 같은 결속에 의해 단단히 묶이는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보았다는 것임. 이때 루이지노 브루니는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들에 주목함
 - “우리가 저녁식사에서 기대하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고려이다... 걸인을 제외한다면 어느 누구도 동료 시민의 자비심(benevolence)에 의존하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 위의 문장에서는 걸인은 자비심에 의존한다고 했지만, 거지도 일 자리를 얻어서 돈을 벌어서, 구걸 대신 돈을 내고 고기를 구입하는 상황을 대비시키고, 시장의 중개를 통한 새로운 관계가 구걸과 자선에 의존하는 직접적 관계보다 훨씬 인간적임을 암시한다는 것임
- 루이지노 브루니는 스미스가 상업 및 시장이 가지는 비인격성 및 상호무관심을 문명으로 이끄는 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석함(Bruni, 2012)
 - 이때, 주목할 지점은 우정과 시장관계는 각각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별개의 분리된 영역에 속하며, 사적 영역에서 우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공적 영역에서 잘 작동되는 시장관계라는 인식임

- 다시, 푸줏간 주인과 걸인의 관계로 보자면, 걸인이 푸줏간에 가서 구걸을 계속 하는 한 자선을 베풀 푸줏간 주인과 친구가 될 수 없지만, 그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푸줏간의 고객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임. 저녁 시간 동네 술집에서 만났을 때 당당하게 대할 것이고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임. 우정이란 필요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관계인데, 시장이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때, 시장 그 자체는 각자의 의도나 덕성이나 선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서로 필요로 하는 것만을 주고받는 상호 무관심의 장소이지만, 각자의 물질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 이후의 사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들도 별도의 공간에서 향유될 수 있다는 것임. 이는 사회적 삶과 경제적 삶의 분리를 개인의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는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앞서 보았던 폴라니의 시장사회와 흡사한 부분이 있음
- 루이지노 브루니에 의해 해석된 스미스의 시장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신분·재산·성별·학력 등 어떠한 자의적 기준과도 무관하게 익명으로 만나 품질과 가격 그리고 지불 능력만을 고려하면서 능력에 따라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공간임
- 계약에 의존하는 시장에서는 호의를 베풀거나 친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만남이 이뤄지며, 각자의 행복은 자신들의 공간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얻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시장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지도 모르는 타인들과의 대면을 최

소화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임. 이러한 시장에 힘입어 사람들은 윤리적 의무로부터 해방된 가운데 경제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

-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시장에서 우리는 각자가 소유한 것을 교환하지만 우리 자신을 함께 나누지는 않으며, 타인과의 적극적 만남에서 얻게 될 고양된 인간관계의 가능성도 봉쇄됨. 그리고 ‘기쁨 없는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서로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게 됨

3) 공리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전통으로의 귀결

- 공동선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각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잘 작동하는 시장이 매개된다면 공동선이 달성될 수 있다는 애덤 스미스의 믿음은 제레미 벤담(1748~1832)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를 통해 보다 강화되었음. 이제 개인은 상호의존적인 공동체 속의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상정됨(Zamagni, 2009)
 - 벤담은 인간 행동의 동기를 쾌락 또는 효용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로 압축하고, 공공의 행복을 모든 개인들이 누리는 쾌락의 총합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추구되었던 시민의 덕성이나 덕행과는 단절된 개념임
- 이제 인간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행위가 산출해낸 효용뿐으로, 자유·평등·권리·타인에 대한 존중 등도 효용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이유에서만 의미를 부여받게 됨. 그리고 이러한 체계 속에서는 어떤 선택들 사이의 도덕적 우열이나 사회적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의미를 잃게 되는데, 이 경우 시장에 대한 사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간섭으로 간주되기가 쉬우며, 결국 폴라니가 말한 경제와 사회의 분리·자유방임주의 전통의 확산 등으로 연결되었음

4) 마르셀 모스와 자유방임주의 전통 비판

- 이러한 흐름에 맞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개인들이 시장에서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률·국가·관습·도덕 등과 같이 비계약적이고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계약 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공리주의를 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비판한 대표적인 작업이 마르셀 모스(1872~1950)의 <증여론>인데, Haan & Hart(2012)에 따르면, 이 책의 목적은 공리주의나 경제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판과도 관련이 있음
 - 개인들의 자발적 교환성향이 물물교환을 거쳐 시장으로 발전했다는 견해와 이타적인 원시공동체가 이기적이지만 효율적인 개인주의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이 그것임. 모스는 공산주의 국가로 시장을 대체하자는 운동에는 반대했지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인간의 항구적인 실존적 조건이며, 시장과 화폐가 20세기와 같이 비인격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임을 입증하려 했다는 것임
- 데이비드 그레이버도 모스의 작업이 뒤르켐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그는 <증여론>을 사회계약의 기원을 인류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흡스 및 자유방임주의 전통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려는 기획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함(Graeber, 2001)

- 홉스는 폭력에 대한 각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에 위임하는 최초의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평화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19세기 들어 허버트 스펜서는 국가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경쟁과 자유계약에 기초한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뒤르켐은 사적 계약의 증가는 국가 권력이 시민적 삶에 보다 많이 개입하도록 만들었다며, 경제적 자유주의 전통의 견해를 비판하였음
 - 모스는 인류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원시사회에도 자발적 계약 관계가 존재했지만, 그 계약은 개인이 아닌 씨족·부족·가족 등 집단적 주체에 의해 체결되었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하는 특정 영역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종교·법·도덕 등 여러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모여있는 ‘총체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
 -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여러 원시부족들의 선물교환 또는 선물증여 행위들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자발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모종의 의무감도 동반한다는 특징을 지녔음. 모스는 선물에 반드시 답례를 하게 만들었던 원리가 무엇인지, 선물의 어떤 힘이 수증자로 하여금 반드시 답례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라는 문제를 제기함
- 그레이버에 따르면, 모스의 발견은 사회계약의 기원이 국가의 탄생보다 훨씬 이른 시기로 소급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원시사회의 교환이 자유시장 이론가들이 상상해온 모습과는 확연히 다름을 입증하는 것임
- 스미스 전통의 경제학자들은 원시경제에서 이뤄진 최초의 교환형태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물물교환이라는 믿었는데, 이는 두 사람이 만나 필요한 물건을 일대일로 교환하되,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된다는 모습임

- 그런데, 모스에 따르면, 경제적 교환이라 부를 수 있는 최초의 형태인 선물교환은 증여와 답례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곧바로 답례를 받는 것이 이익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답례 없이 주어진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임. 그러나 선물교환 관계에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당장의 답례가 아니라 미래의 답례를 기대하고, 수증자 또한 꼭 답례할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나중에 적당한 시점을 택해 답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경제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모스에 의하면, 선물교환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타인과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상대의 안위를 우리 자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려는 노력의 산물임. 모스는 이러한 입장에 서서, 순수한 자기이익 추구는 19세기 시장체제에서야 비로소 성립한 개념이며, 순수하게 사심 없는 선물에 대한 근대적 이상 역시 전적인 자기이익 추구라는 개념의 불가능한 거울 이미지일 뿐이라고 비판함(Mauss, 1925; Graeber, 2001)

- o 선물의 어떤 힘이 수증자로 하여금 반드시 답례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모스의 대답은, 인간의 경우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성격을 거스리기가 어려우며, 그것이 상기시키는 다종다기한 사회적·정서적 유대에 감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답례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도 답례를 한다는 것임 (Haan & Hart, 2012)

-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호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거래에 나서는 현대인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때 모스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원시인들이 이기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그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원시인들 또한 현대인처럼 내면에 복잡한 충동이 혼재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노골적으로 이기심만을 내세우는 19세기 이후의 공리주의에 기반한 ‘호모 이코노미쿠스’와는 달리 이기적 동기를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감추려 했다는 점임. 노골적 이기주의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자각과 함께 상호공존 및 상호존중을 위한 도덕적·사회적 제약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는 바람직한 순기능을 발휘했다는 것임(Graeber, 2001)

- o 결국, 모스의 연구에 따르면, 개개인들의 계약을 위한 자유시장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이타성에만 근거한 집단을 창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임. 인간이 만든 동서고금의 제도는 모두 개인과 사회, 자유와 의무, 자기 이익과 타인에 대한 염려 등 여러 이항대립의 통일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공리주의에 기반한 근대 경제학은 이 두 기둥 중 한쪽에만 기초를 두려는 한다는 점에서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임

- 모스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인간의 균형을 회복하려면 모종의 사회혁명이 필요한데, 그 첫 걸음은 현대의 경제적 삶에 선물교환 또는 총체적 증여(total prestation)을 도입하는 것임. 각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모종의 의무를 느끼고 자신의 몫을 내어놓는 방식인데, 그 구체적 형태는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나 합의수준에 따라 다양할 것인데, 보험·임금계약·복지국가·직능단체·협동조

합·상호보험도 그러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Mauss, 1925; Hahn & Hart, 2012)

-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속에서 피에르 부르디외도 <증여론>을 거론하면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호의가 진정 가능한가에 관한 질문 대신 사람들이 선물경제에서 묘사되는 식의 사심 없는 호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Graeber, 2001)

3 • 시민경제 전통과 현재적 함의

1) 시민경제 전통(Zamagni & Bruni, 2004; Bruni, 2012)

- 시민경제(civil economy)라는 용어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안토니오 제노베시가 펴낸 <시민경제에 대한 강의>에서 처음 등장했음. 시민경제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 좋은 시민을 만들어 내는 경제, 시민사회의 든든한 보루가 되는 경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
- 시민(市民)이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도시에 살면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슬기롭게 통치하고 공동선을 이루고자 하며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야만인이나 노예와 대비되는 존재임
- 시민경제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1767년 두 용어가 동시에 출현했다고 함.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스코틀랜드에서 애덤 퍼거슨이 펴낸 <시민사회 역사론>에서, 시민경제라는 용어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안토니오 제노베시가 펴낸 <시민경제에 대한 강의>에서 등장

- 시민사회는 서구문명의 산물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그리스의 폴리스(polis)와 로마 공화국의 키비타스(civitas)에 경험적 뿌리를 두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테이아나 키케로의 시민적 덕성(virtue)에 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며,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초한 자기통치를 핵심 원리로 삼고 있음. 근대의 시민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스 및 로마와 차별화를 보이기도 함
- 시민경제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토마스 아퀴나스 전통을 계승해, 인간의 사회성과 호혜성을 강조하며, 우정이나 우애(philía)에 기반한 시민적 삶의 전통을 계승하고 상업과 공동체 사이의 연계를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게 이들의 목표임. 대표자는 나폴리 출신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안토니오 제노베시(1713~1769)로 애덤 스미스와 동시대인임
- 이 둘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음. 스미스가 인간 본성의 핵심 특징 중 ‘같은의 확인’에 주목했다면, 제노베시는 ‘좋은 것의 나눔’에 더 주목했다는 대비가 가능하며, 전자가 ‘개인’에 무게중심을 더 둔다면 후자는 ‘우리’에 무게중심을 더 두는 것으로 보임. 우리는 시장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스미스가 동감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입장이라면, 제노베시는 우애·호혜·상호부조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입장임
 - 이 점은 장사에 임하는 상반된 태도들에서도 확인 가능함. 전통적 경제이론이나 근대적 인간관의 통념은 내가 타인에게 주는 돈은 최소화하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최대화하자는 것이며, 이는 비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판매가격은 가능한 높이려는 행동으로 이어짐
 - 반면, 좋은 것을 나누려는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것을 상대가 유

용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덤도 주고, 상대방 처지가 어려우면 값도 깎아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장사가 덕행임이 분명해짐. 이 경우 장사의 본질은 더 많은 이윤의 획득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것임. 존경받는 식당 주인, 돼지값을 높게 쳐서 지급하려는 양돈협동조합,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판매하려는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모두에 이러한 범주에 속할 것임

- 나폴리의 시민경제 전통은 경제적 활동을 시민적 삶의 진정한 표출로 간주하며, 시장이 상호부조의 공간이자 덕행들이 만나고 장려되는 장소로 평가함. 사람들이 교역을 행하고 시장을 발전시키는 활동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간주되는데, 왜냐하면 공동체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활동을 통해 혜택을 입기 때문임
- 시민경제에서 강조하는 시장의 핵심은 신뢰와 신용임.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때 거래가 늘어나고, 부의 증대도 가능하기 때문임. 이때 신뢰는 다시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를 구분하며, 공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짐. 사적 신뢰(private trust)는 평판이 좋은 상인의 물건을 사는 것과 관련이 되며, 공적 신뢰(public trust)는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낯선 이들을 믿고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적 신뢰가 개인적이고 반복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면, 공적 신뢰는 공동체 전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때, 공적 신뢰는 현대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과 유사한데, 이는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주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을 의미함.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으로나 쇠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공적 신뢰의 결여나 부족 때문이라는 게 제노베시의 기본 입장이며, 나폴리 왕국의 몰락도 이러한 틀로 설명을 함

- 공동체의 안녕과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공익단체 등 공적기구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으로 중요함. 공적기구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려면 동료 시민들이 표방하는 호혜·상호부조·공공성에 대한 헌신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함. 시장이나 현장 등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이러한 호혜나 상호부조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는 공적기구에 대한 신뢰로도 연결됨. 이때, 모든 종류의 집단적, 개인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시민정신으로 충만한 시민들임
- 시민경제 전통에서는 호혜와 상호부조를 통해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시민의 덕행이고, 이를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통해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선, 시장 자체가 덕행에 대한 보상기구로 이해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시장은 대표적인 외적 보상기구로, 타인들에게 유용한 활동들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임. 시장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활동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며, 특히 사회적 유용성은 높지만 내적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크지 않은 활동들에도 외적인 물질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활동들을 독려함.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상업은 남을 속이거나 갈취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잘 채워줌으로써 좋은 것을 나눔으로써 이익을 얻는 활동으로, 이게 바로 상업이라는 업(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덕행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고 보상하는 데 한

계를 노정함. 이용자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소비가 가능하거나 이용자들의 지급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유용한 활동을 펼치더라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곤란하기 때문임. 또한 의식적으로 외적 보상을 멀리하며 공공선을 제고하는 이타적 덕행에 대해서는 시장이 도움을 줄 수 없음

- 시민경제 전통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개인들의 보수에 사회적 포상을 추가하자고 제안을 함. 자신의 이익에 더해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선택을 할 경우 추가적인 보수나 보상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호혜에 나섬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임. 그런데, 이때 물질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몰아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그러려면 공동선에 대한 미미한 기여에 높은 보상을 가하거나 진정으로 유덕한 공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낮은 보상을 해서는 곤란함

2) 현재적 함의

-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정신의 쇠퇴라는 지적이 많음. 이처럼 시민정신이 쇠퇴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비인격적인 시장의 확대와 관료적 정부의 확대가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음. 월마트나 온라인거래 등이 효율과 편리함은 가져왔지만, 주인과 손님 사이에 존재하던 양질의 인간관계가 사라지게 시민정신을 쇠퇴시켰고, 자기조직된 시민들에 의해 공동체의 유지나 관리를 위해 행해지던 많은 일들이 국가로 위임됨에 따라 이웃에 대한 관심은 물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임
- 에릭 리우와 닉 하누우어에 따르면, **시민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도**

국가도 주지 못하는 것을 사회에 제공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공적으로 존재하려는 의지이자 활동이며, 예의를 갖춰 이웃을 대하고 낯선 이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일이며, 자식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고 자원 봉사를 하는 것들을 의미함. 이때, 인간은 남을 따라하는 존재이므로, 각자의 행동이 강력한 전염력을 지닌다는 점도 강조가 됨. 아무리 사소한 행동도 타인에 의해 모방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행동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게 친사회적 방향으로 증폭될 수도, 반사회적 방향으로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시민정신의 습관과 문화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력 넘치는 사회를 위해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Liu & Hanauer, 2011)

- 원시사회의 경제적 교환의 장은 선물 증여가 이뤄지는 공간이었으며, 그 속에서 양질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음. 비록 그들을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정신에 가까운 것들이 형성되었을 것임. 19세기에 자본가들과 정부의 담합 속에서 원자화된 개인들의 이익 추구만 강조되는 자유방임시장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공동선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좋은 시민들도 창출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적 시장이 시민과 민주적 정부의 협력 속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시장 속에 보다 많은 인격적 관계가 고취된다면, 시장은 개인적 필요를 채우는 장소임과 동시에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마당이 될 수 있을 것임.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삶에 다가가 말과 생각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인격적 관계가 시장의 이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각자는 소유물의 교환에 더해 서로 ‘친구’가 되고 각자의 좋음을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임

04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방향

1. 국가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
2. 한국 사회적경제의 정책발전
3.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1 • 국가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

- 산업혁명을 계기로 공동체의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민간영역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의 생존 및 기본적 필요 중 일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음. 영미권에서는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자선활동을 통해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켰고, 유럽 대륙에서는 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 등이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킴
- 이 점에서 이들 제3섹터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더해 시민사회의 참여적 경험이 수행되던 주요한 통로였으나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흐름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로 치부되었다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됨
- 사회적경제는 1990년대 후반 유럽사회에서 개념화되고 제도화된 이후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 저변에는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방식이 갖는 폐쇄성과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음
- 이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전통과 기업가 정신의 결합을 상징하며, 사회적경제의 경제총량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시장과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형태로 구체화 되었음(노대명 외, 2017)

- 사회적경제의 각 국가별 특성은 해당 국가에서 복지국가의 경험 유·무와 기존의 복지정책, 제3섹터가 복지 및 실업 극복에 참여 및 기여해온 정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처럼 복지국가의 위기 및 복지 축소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던 과거의 조직들이 변모·발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탄생하게 됨
- 개별 국가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고유한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에 기반하여 각기 독특한 정부-기업-제3섹터-사회적경제조직의 연계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3섹터가 협동조합·공제조합·우애조합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와 빈곤완화에 기여를 해왔고 규모 또한 상당히 컸음. 영국의 경우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3의 길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면서 복지의 민영화 및 축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3섹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주목받으며 사회적경제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미국은 1980년 등장한 신자유주의 성향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과 더불어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업과 재단의 투자 및 지원을 대폭 축소됨
- 전통적으로 미국은 저소득층의 복지 및 빈곤 문제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보다는 기업이나 부유층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나 비영리조직에 의해 해결함

- 비영리조직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영리 기관들은 영리추구 활동을 벌이게 되었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도 본격화됨. 미국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배경으로 두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발달하게 되었음
- 이와 상이하게 한국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IMF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국가복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으로 보건복지부의 공공근로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연속 상에서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됨

2 •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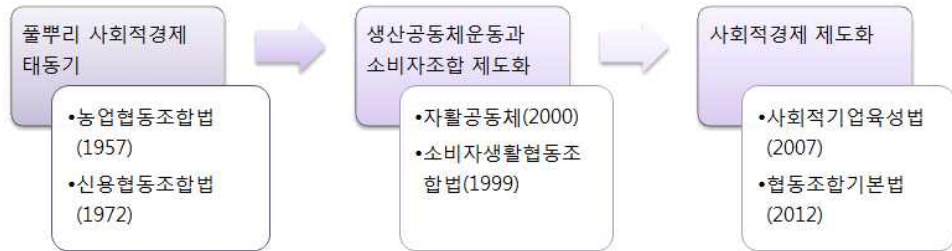
1) 제도화 과정

- 한국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농협이 최초로 볼 수 있음. 이후에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연초생산협동조합법(1989), 산림조합법(1980)이 법제화 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이 제정됨
- 또한,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마련되고, 새마을금고법(1982)이 마련됨. 특히 1999년 소비자 조합에 대한 법적인 토대가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이 마련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기획재정부, 2012)
- 일제 강점기부터 이 시기까지를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태동기로 이 시기

의 특성은 신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과 노동자협동조합이 생산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관계형 서비스 제공,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중심으로 발달하였음

- 1985년부터 2006년까지는 생산공동체운동의 제도화 시기로 생산공동체 운동이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에 집중함.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회적기업 제도화 시기로 자활공동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받았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제공 그리고 사업적 경쟁력에 집중을 함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를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제도화 시기로 기존 협동조합의 개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킴
-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로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게 됨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함. 이런 시기에 일자리 창출의 초점을 맞추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정부 주도로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됨.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정부정책은 매우 크게 역할을 함.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진흥법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4-1] 한국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



2)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에 제 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이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수립한 최초의 대책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언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회적 금융 조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지역 기반연계 등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 정책방향은 소셜 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가맹사업, 지역기반 연계 분야 등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육성해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설정함. 즉,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진출분야 확대 등 두 갈래 전략(Two-Track)으로 추진하는 것임
- 핵심추진 대책은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

업 판로지원 선도, 신재생 에너지·도시재생 등 주요 분야의 진출을 지원함. 정책 추진 성과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촉진하는 제도적·재정적 혜택을 확대하였고, 금융측면에서는 2018년 기준 정책금융 1,937억 원으로 목표(1,000억 원) 대비 94%를 초과하면서, 정책금융 지원을 확충함. 또한, 인력측면에서는 18년 기준 667팀 창업과 2,268명 고용하면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하고, 폴리텍 신중년 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하였으며(4개→28개 캠퍼스, 300명→5,370명), 18년 기준 석사·학부 등 4개 과정 총 141명을 대학 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운영 등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함

- 이번 정부의 사회적경제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최초 대책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을 2017년 10월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사회적경제 조식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2018년 2월에,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같은 해 5월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 또한 개별 부처에서는 2018년 7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9월에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음. 2019년 들어와서는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농림축산식품부)을 발표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함으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표 4-1]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연도	정책명	발표일	발표주체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0.18	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8	관계부처 합동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5.16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7.3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18~'22)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7.26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방안	7.26	국토교통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9.6	교육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11.9	관계부처 합동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2.19	국토교통부
2019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	3.21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3.25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9.3	관계부처 합동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11.5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2.5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1.15	관계부처 합동
2020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3.31	기획재정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7.22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8.13	관계부처 합동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 국가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중요한 법률의 제정뿐만 아니라, 공공조달과 같은 입찰에 사회적경제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부 환경은 사회적경제에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공공사업에 사회적경제를 참여시킴으로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의 임무를 수행함. 또한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한 유인책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필두로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이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2] 한국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구분	연도	주관부처	비고
장애인보호작업장	1987	보건복지부	비영리단체/정부 일부 지원
공공근로사업	1998	행정안전부	정부 주도/정부 재원
자활사업	2000	보건복지부	비영리단체/정부 재원
사회적일자리사업	2003	고용노동부	민간주도/정부 일부 지원
사회적기업	2007	고용노동부	민간주도/정부 일부 지원
마을기업	2010	행정안전부	민간주도/정부 일부 지원
협동조합	2012	기획재정부	민간주도

- 정리하자면, 2000년 이전 자발적 맹아기와 관습화를 거쳐 2000년 초, 중반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개념의 소개나 정책적 도입방안이

검토되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전후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형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확산을 도모하였음(신명호 외, 2016; 최준규, 2020). 2012년 전후 서울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을 위한 활성화 논의가 시작되어 2015년 전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출현함. 2020년 전후에는 정부 및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가치와 사회혁신 영역으로 논의가 확장됨(최준규, 2020)

-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절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3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1) 서울사회적경제 활성화 2.0

- 서울시는 2020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선포하고 5개년 액션플랜을 제시함. 이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은 서울시민의 일상문제와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시민 생활안전망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음
- 이는 사회적경제 1.0(2012~2018년)이 민관협치로 공동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자치구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도모하며 사회적경제 협동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중심)의 양적 확대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개발하고 보급하

는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에서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함(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추진배경으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시민과 혁신주체의 증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자 동시에 서울이 지난 10년 간 민주주의 시민중심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환의 시기로 보고 지금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은 생활권 단위 선순환 “사회적경제 공동체”형성을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시민의 일상문제 해결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와 재화의 이용을 사회적경제로 전환시켜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관리기업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시민 참여를 촉진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일상성을 높이고 누구나 참여하는 시민경제로써 사회적경제 전환임
- 이를 위해 민주주의 서울과 연계하여 시민 수요가 높은 의제 및 우수제안을 지역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후 정책화를 실행하고 사회적경제 시민참여 정책사업 확대 및 시민의 일상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지속과정을 구조화함

- 다시 말해,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돌봄, 먹거리, 교육, 생활서비스, 주거 등 통합적인 생활관리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일상안전망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과 기초(자치구) 및 지역단위 전략사업을 연계한 협업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하며 정책사업으로 자치구 단위 “서울형 생활관리기업” 모형 개발하여 지역 돌봄, 건강, 주거,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 5대 과제와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함
 - 5대과제로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하고자 함
 - 16개 단위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살이 살림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주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 기업 육성, 연대·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육성, 사회투자기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시장 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속 확대,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자율경영공시 활성화, 시민 인식개선,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강화 등이 있음

[표 4-3]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5대 과제 및 16개 사업

5대 과제	16개 단위사업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주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연대·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육성
	사회투자기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시장 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속 확대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자율경영공시 활성화
	시민 인식 개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강화

출처 : 서울시(2019).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5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 확장가능성

1.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FGI 결과
2. 시민경제 구체화와 실천적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

1 •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FGI 결과

1) 시민은 누구이고 시민경제는 무엇인가?

- 시민은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절대 왕정기와 시민 혁명기를 거쳐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3가지 갈래인 도시인으로서 시민, 자산가로서 시민, 논쟁(토론)하는 시민으로 보고 있으나 맥락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의는 큰 틀에서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지을 수 있음
- 현대적 의미로 시민은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겠지만 시민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시민은 사회적경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깨어있고 교육받은 시민으로 보아야 한다고 연구참여자 C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음

제가 시민의 탄생 썼던 것이 2016년 그때였는데 레지던트에서 주민에서 시민으로 민중에서 시민으로 그리고 예전에 피플이라든가 클래스 이런 개념이 지나치게 집합적, 획일적 이로부터 대상화시키는 시민은 아테네 이후로 3가지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인으로서 시민**인데, 농촌이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시를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교양인으로서 시민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 기본들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노동, 소유를 강조하는 **자산가로서 시민**이 있고 3번째는 토론하는 주체로서 토론하고 참여하고 **논쟁하는 시민**으로서, 두 분들이 깨우침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각각의 얼굴 중에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른 것이죠. 그 3가지 뿌리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시민이라는 개념 안에 어느 맥락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무엇을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이에요. 일단 크게 보면 **시민은 표준적인 견해는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큰 의미**...(중략)...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민경제라는 것을 쓸 때, 뿌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깐
시민공화주의라는 것은 철학적 뿌리가 시민주권론도 있고 그러면 시민경
제학을 쓸 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뿌리들이 있는 것이죠. 일련의
연구들, 시민공화주의에서 물질 토대로 시민경제학, 아무튼 이병천 선생
님이 계속해왔었고, 그게 아마 일본에서 협동조합 이런 것을 해왔던 사회
적경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흐름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
며) 왜 사회적경제를 불만을 (있으며)하고 시민경제로 쓰는지 국민주권론
을 안쓰는 사람들이 다국적, 글로벌에서 개별 국가에 헌법에 담혀있기 때
문에 국민이라고 하기보다 시민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열려져 있다. ...
(후략)... <1차 FGI 연구참여자 A>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기존의 있던 경제체제나 경제구조의 모순에서 비롯
된 것을 일종의 변형으로 본 어쨌든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이라면 이들의 주체, 이들의 영향 또한 교육되어
진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어진 구조이지 않을까 사회적경제하고 지금 이야
기하는 것의 시민경제 시민경제라는 것 자체도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이 **시민이라는 것이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시민을 포함
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경제의 의미 또한 어쨌든 사회
적경제를 만들어오고 수행하는 **깨어지고 열려진 교육되어진 학습되어진
(깨어나고, 열려진, 교육받고, 학습된) 시민들의 경제**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단 막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1차 FGI 연구참여자 C>

- 반면, 연구참여자 B는 자본주의에서 자산가로서의 시민은 경제력이라
면 시민경제에서는 생태적 시민성, 생태적 각성을 해나가는 시민으로
보고 있음. 연구참여자 B는 이 때 자산을 연대와 협력으로 보고 깨어있
는 각성된 시민이 사회적경제를 끌고 가려고 했지만, 사회적경제가 가
지고 있는 가치가 잘 작동되지 않아 오히려 확장된 개념의 시민을 제시
함

시민을 정의할 때 **도시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이렇게 개념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국가는 잘 작동하지 않아도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지적을 좀 더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산가로서 시민**은 자산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하면 그럼 대안경제하고 연대와 협력이니깐 그럼 **자산을 무엇으로 볼거나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깨어있는 각성된 시민**은 기존의 실패가 꾸리는 것 없이 사회적경제가 끌고 가려고 했지만 안따라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기후, 코로나에서 환경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생태시민성, 생태적 각성을 해나가는 시민** 그것을 논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공유범이니 이런 것이 나오는게 도시 안에서 가급적 생태학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순환경제랑 이러한 것이 연결이 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다른 논의의 생태적 각성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면 좀 시민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치면, 그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연결하면 어떨까 싶어요. <1차 FGI 연구참여자 B>

- 대다수의 연구참여자가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지역기반의 시민에 의한(by citizen), 시민의 위한(for citizen) 경제로 정의하였으며 연구참여자 L은 여기에 덧붙여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영역(푸드, 돌봄, 교육, 주거 등)에서 전문가 중심(시민참여가 없는)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 통제되고 주체화되는 것으로 시장경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진술함. 이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와 확장 속에서 시민주도성을 담고 있음
- 한편 연구참여자 K는 사회적경제와 관련지어 시민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기능적이며 사회적경제 본질이 상향식(bottom up)이므로 시민주도, 시민참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함. 또한 연구참여자 J의 경우, 시민경제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경제의 고객이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소비자)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내 관계의 시장을 이야기하고 별도의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를 규정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의 하나로서 시민주도성을 강조하여 사회적경제를 더 명확히 정의 내리기 위해 것이라고 진술함

시민경제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측면으로 구분해서 행위자,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영위하는 모든 경제가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자본이나 주체성이 상실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 언제든지 통제되고 개별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그들의 주도나 역량에 의해 운영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주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경제와는 구분되는 식으로 하기 보다 주체로서의 시민이 잘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차 FGI 연구참여자 L>

2) 왜 시민경제인가?

① 한국 사회적경제 현실 : 사회적경제의 모순과 작동오류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제도적 동형화를 보임. 따라서 작금의 한국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가진 철학이나 가치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연구참여자 G와 I는 관 주도적으로 행정 목표로 사회적경제가 도입된 것이 문제로 지적함
-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 I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가치지표)가 인증사회적기업들의 성과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보다는 고용유지율이나 자본 유지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왜곡 현상이 발생하므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제도화된다면 성과지표를 재설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봄
- 연구참여자 G와 H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측정에 있어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s), 임팩트만이 아니라 투입(input)과 과정(process)가

함께 측정되어야 시민경제가 가진 장점이 확보될 것이라고 진술함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문제의식에 대해 단편적으로 보면 **행정 목표로 사회적경제를 도입해 왔다는 측면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 등 output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너무 좋다, 가져다 쓰자 라고 하는 행정 목표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를 본류에서 다른 흐름으로 끌어내린 기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차 FGI 연구참여자 G>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때,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관에서 갖고 가는, 관 주도적으로 **행정 목표의 하나로서 사회적경제가 도입되고,** 도입된 것은 기존에 민간에서 도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속화된 것은 행정 목표달성을 위해 시작된 것이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지는 개념은 계속 변화하고, 현장도 변화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띄는 시그널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현장과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지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최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천착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 중 많이 사라진 것이 best practice에 대한 연구거든요. 개별 사회적기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경제들이 오히려 1차 때 강조된 비즈니스 모델 중심을 만들어내는, 일자리 중심, 재무적 가치가 창출되는 사례들이 best 모델로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려 초반보다 작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회의감, 너무나 쉽게 기재부 협동조합 얘기를 들으면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버리고 가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개념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장은 오히려 양적으로 확대되고, 재무적으로도 개선이 되었고, 노동조건이나 확대가 되었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은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최근에 기재부 최근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이론 논의와 현실 검증을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은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측면에서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것이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구요. <3차 FGI 연구참여자 I>

- 인류 역사에서 200년도 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강력한 힘으로 시장논리로 무장된 경제적 인간관을 탄생시켰고 이에 대한 대안적 혹은 보완적

개념으로 사회적경제는 인식됨.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지향적이며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지니지만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보다는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성장함

- 이는 한국 사회적경제가 정부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방식이 개별 조직지원의 결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가 중심 그리고 창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연구참여자 H는 이러한 흐름이 사회적경제 내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있다며 호혜성과 공동체성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진술함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게 시장시스템, 가격시스템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회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사회로 만들어버린 셈이 되어버리니깐 개인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게에서 가사노동, 이런 것은 없고, 10시간 동안 회복되어서 일하는데 보태준 것 있냐 그런거죠 회복비용은 안주고 10시간 노동비용은 준 셈 인거죠. 기업의 시장논리에 가격에 묶여 다녔는데, 경제적 인간관이라는게 그럼 생태적 시민권이면 내가 자연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라는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자. 이런 부분에서 개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FGI 연구참여자 B>

(전략) 인재육성을 해도 결국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형태로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후략) <2차 FGI 연구참여자 E>

주류경제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해요. 로버트 오웬의 책을 읽어보면, 인간은 플라스틱한 존재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이타적이고 다른 감성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한 여러 가지 **본성 중 특성 사람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로 나타나고 하면 사람의 성향이 더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조금 이기적인

사람은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호혜성이나 공동체적 본성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이타적인 사람은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정규분포를 못 바꾸겠죠 하지만 그 평균으로 갈 수는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민경제에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시민경제가 호혜성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는 부분도 이타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 있다. <3차 FGI 연구참여자 H>

- 한국 사회적경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법적(혹은 지침)으로 구분되어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배제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시민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는 제도권 내 조직 이외에 마을공동체, 소상공인 등의 여러 주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임
- 연구참여자 L는 한국사회가 기존 시민단체와 같은 강한 연대보다는 느슨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사회가 되어 시민사회의 재정의로 지역단위 시민단체(비영리 조직)이 자립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 전략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선택 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진술함.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주체를 포함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전략) 시민경제는 생활주변에 있는 정식으로 산업체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2 차 FGI 연구참여자 E>

기존에는 시민단체 등 강한 연결망을 가진 조직체를 중심으로 했으나, 지금은 개인이나 개인 간 관계, 느슨한 네트워크, 그런 강력한 조직이 모두 결합해 작동되는 것 그 자체를 시민사회라고 한단말이죠. 한 사람이 개인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가는 여러가지 집합화의 과정을 봤을 때, 그 전반을 다 시민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영리냐 비영리냐를 떠나서. 시민사회가 자체의 힘을 가지기 위해 가능하고 이때 비영리는 약하고, 소지역 단위에서 자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영리단체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고, 경제적인 기제를 같이 결합하는 진화할 수 밖에 없다. 이게 중앙차원에 전국적인 참여연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단위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자립적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 사회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자연스럽**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재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활용을 하는 주체의 다양성이 많아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양한 주체들이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식이 주민자치회일수도 있고,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 포용가능한 것인가. 사회적경제의 포용되나 안되느냐가 아니라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회적경제도 쓰는 것이고, 소상공인 경제도 서는 것이고, 사회적경제를 자꾸 목적과 연관시킬 경우는 정책 카테고리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4차 FGI 연구참여자 L>

- 한편, 연구참여자 D는 서울시의 경우, 주민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와 같이 법인격이 아닌 조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그런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사회적경제를 아울러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생겨 균형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확인해 줌

(전략) 서울시에서 주민공동체 구체적이지 않은 형태들이나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가능성 있는 것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큰 정책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저희 진흥원에서도 그런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사회적경제를 아울러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생기고 그 안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또는 이 안에서 기존에 관심받지 못했던 틈새나 통합화하는 아이템 시키는 사업화는 아니지만 균형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아니면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의 목적성을 잃지 않고 균형 있게 가져가는 (후략) <2차 FGI 연구참여자 D>

② 주체 없는 사회적경제(주체 강조)

-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반해 개념을 정의하다 보니 사회를 강조하게 되어 그 안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주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시민경제라는 용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연구참여자 D와 E의 진술을 통해 확인함

사회적경제가 연대경제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있던 경제 시장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주식회사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는 반해서 용어정의를 하다보니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사회를 강조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안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경제로 가면 그 안에서도 특히 주체는 하나하나의 생각과 욕구를 가진 시민이다 그거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공간적 범위가 서울시이다 보니, 서울시는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에 기존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양상했던 구조였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워낙 이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보완하는 대체하는? 일상 속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나가는 속에서 서울시는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의 주도하는? 어떤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일치할 때까지의 논의가 모여서, 과정을 걸치면서 기존의 시장경제, 아니면 정부 주도의 주도의 아우르는 포괄하는 우리 주도의 주민 주도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경험치들이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적경제를 더 아우를 수 있는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시민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이나 선언,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개념 규정이나 조직 형태보다는,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차 연구참여자 E>

주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시민경제는 시민 개개인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것이고... <2 차 FGI 연구참여자 D>

- 한편 연구참여자 J는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주체를 시민이든, 주민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좀 더 규정해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기 역할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술함

사회적경제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 지 15년 정도 되면서 느꼈던, 한 가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새로운 기업인가? 혁신적 기업인가?라는 고민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활동이라는 건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활동을 하는 구성원으로 보는데, 어느 순간엔가 정체성이란다가, 존재 의의 측면에서 힘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 고민이 되어왔어요. 협동조합이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것을 긴장 속에서 가져가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도 그런 자기 공명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시민이라 표현하든 혹은 주인이라 표현하든, 그것이 좀 더 규정되어야 주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가져 갈 수 있으리라 고민을 해봤어요. < 4차 FGI 연구참여자 J>

- 전술했듯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사회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과 같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면 시민경제는 내 생활 영역 안에서 그리고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부분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가며, 과거와 달리 나와 비슷한 고민(일상 혹은 평범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논의에 가능성을 열어줌

시민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생활 내 바운더리 안에서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영역들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창업이라는 것이 나랑 좀 떨어져 있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각 부처에서 공공서비스와 다른 영역에서 결합이 되다보니 사실 그게 내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기업가여야 하고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고, 시도해볼 수 있겠다 그런 의식전환은 있는 것 같아요. <2 차 연구참여자 E>

- 연구참여자 B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논의된다면, 자마니와 부르니(2004)가 시민경제학에서 바라본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협소적인 개념을 대신하여 대안적 차원으로 시민경제를 확인해 줌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책에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를 부차적인 보완적인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대안 경제로 전면화하는 생각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지역경제 그 수준이 아니라 지구경제를 다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사회적경제라고 할 때, 너무 일부로 보이는 것을 전면화하는 것이 어떨까 <1차 FGI 연구참여자 B>

- 한편 연구참여자 B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현재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시민경제라는 용어가 보완재 역할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확인해 줌

현재 사회적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시민경제에서 보완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개인이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막연하긴 하지만. <1차 FGI 연구참여자 B>

- 또한 연구참여자 C의 아래 진술을 통해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차용하면 상업화되어진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되돌려 시민성이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됨

(전략) 사회적경제에 너무 상업화 되어진 것들을 시민사회로 끌어당기는 내용의 정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1차 FGI 연구참여자 C>

3) 시민경제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가능성

-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연대와 협력라는 가치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작동이 되지 않으므로 시민경제를 통해 그 가치를 확산가능한 것으로 연구참여자 B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통해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기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전략) 케이트 레이버스라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겨레에서 전환 도시할

때,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 분이 도넛경제학인데 **도넛 안으로 밀려나면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가면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깐 도넛위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느냐** 이게 도넛경제학인데, 거기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시장에다가 우물안에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순환되는 것이다. 수요공급 원리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지만 거기에 고려안한 부분이 **가계, 생태적 가치, 뭐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민경제학이라는 것도 시민이라고 할 때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집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개별 시민들이 자기가 경제 책임도 지고 고민도 하고 그런 시민으로서 그렇게 연결되는 경제 그걸려면 시민들 사이에서의 연대와 협력** 이런 논리구조들이. <1차 FGI 연구참여자 B>

-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도 다양한 지향점을 가진 조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가 확장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는 연구참여자 D의 진술문을 통해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개념되면 경제적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로 인식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확장성이 가능하다고 확인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지원을 오래 담당해 왔는데, 원하셔서 판로를 지원해드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유지되는? 더 **확장 안 하고 유지만 하고 싶다는 조직도 있어요. 사회적경제 조직 영역 내에도 다양한 지향을 가진 조직들이 많아요.** (후략) <2 차 FGI 연구참여자 D>

- 연구참여자 H는 시민경제를 이용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산, 소비, 교환 영역에서의 시민경제 혹은 사회적경제를 방식의 적용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진술함

(전략) 우리가 시민경제,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제도를 먼저 생각하니깐, 그것을 뛰어 넘어서, 실제로 생산 소비 교환 영역에 모두 걸치는 방식으로 확장해야. <3차 FGI 연구참여자 H>

- 연구참여자 E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체성을 담보한 활동으로 구현되면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숨겨진 인적 자원이 발굴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가 구축되는 결과물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도 보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주인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중심성을 갖고 활동을 구현해 나가면, 사회적경제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선순환 구조는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그 안에서도 자원이 활용이 되고 지역 내에서도 그간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던 인적 자원들이 발굴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니깐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 차 연구참여자 E>

- 또한 공동생산과 공동소비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형성되어 사회적경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인해 줌

공동생산, 공동소비 등을 통해서 **마을관리기업** 혹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험화 되고 축적되고, 다른 지역에서 사례들을 그대로 하지 않고 조금 변형해서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경제를 확장하는 데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차 연구참여자 E>

4) 고려할 점(시민경제가 가져오는 혼란, 기계적 결합, 기본소득논의)

-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가 논의된다면, 과거 사회적경제에 요구했듯이 시장에서 영리기업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라는 잣대가 아닌 관계에 기반한 호혜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반면에 연구참여자 K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므로 시민을 강조하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고 진술함

시민경제는 화폐적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재**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결국은 **호혜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3차 FGI 연구참여자 H>

- 한편, 연구참여자 A와 G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논의될 때, 자칫하면 새로운 개념으로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함. 또한 연구참여자 I는 사회적경제가 시민중심의 경제로 논의될 때, 공동체 모델 동학과 비즈니스 모델 동학은 달리 작동하여 기계적인 결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함²⁾

시민경제가 하나가 우려가 되는 것이 특정인을 위한 자유시민의 경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을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러한 4대 부문의 담론의 그 구체적 현실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해보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다 이제는 이름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를 진단해보고 새롭게 방향설정을 해야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야하는데, **혹시 잘못하면 이제 사회적경제가 시작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념적 혼란이 문제의식이나 구체적인 조직, 문화, 활동주체가 있는데 유행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상화된 것이 생활정치, 뿌리하고 유행을 쫓아서 가면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1차 FGI 연구참여자 A>

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용어가 맞다고 해서 사회적경제를 가치를 크게 하나의 경제의 특성과 방식이라고 볼 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혼돈스럽거나 자꾸 왜 만들어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3차 FGI 연구참여자 G>

공동체 모델의 동학과 비즈니스 모델의 동학은 달리 작동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공동체 기반의 조직인 생협조차도 공동체 모델과는 전혀 다른 방

2) 연구참여자 I는 경기도의 경험적 실패를 가지고 우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경기도와 다른 측면(지리적, 공동체 경험치, 사회적경제 경험치 등)이 존재하고 10년간 시민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있어 그런 점에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식으로 2차원적 그림은 같더라도, 공동체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은 각 주체 간 상호 영향의 화살표 방향 등이 다른 방식으로 가서 이것들을 서로 결합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에 있다. **시민중심의 경제라는 것이 대상자의 결합이라는 부분을 대상자의 기계적 부분은 강조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공동체라는 영역과의 기계적인 융합으로만 국한이 되면 굉장히 떨어지기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3차 FGI 연구 참여자 I>

- 더불어 연구참여자 A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사용할 때 자칫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사회적경제라는 단어가 사회와 경제의 결합으로 단순히 사회로 정의내리면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시민주권론에서 논의하듯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사회와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개념 지을 때는 단지 주체로만 시민이 아닌 사회적경제 운영 방식과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시민경제는 두 가지의 모순성이 잘못하면 되게 시민주권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율성하고 개인의 포맷을 좀 두어요. 국민 이런 부분은 너무 집합적이란말이에요. 시민은 개개인들의 자율성을 기초로 해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연대한다고 보지만, 시민과 객체로 보는 사람들은 사회와 어느 정도 단절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에서의 social의 뜻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연대 협력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경제라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경제도 있고, 개인, 노동, 기업, 다 있는데 이때 시민이 주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님 사회적경제처럼 경제운영방식이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인지 이게 잘 안 나타나 있어요. <1차 FGI 연구참여자 A>

-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가 논의될 때 연구참여자 B는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등)만의 리그가 아닌 다양한 주체(소상공인,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그 역할³⁾을 해

야 하고 사회적경제를 지원 혹은 육성하던 방식에서 나타났던 즉, 양적 성장으로 인한 무늬만 사회적경제를 탄생시켰던 전례를 통해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우려함. 또한 돈벌이의 경제가 아닌 살림살이의 경제를 뛰어넘어 공동체 차원의 통합원리인 호혜적 경제(Polanyi, 1977)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조를 만들고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확산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해 줌

- 연구참여자 A도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가 논의될 때 참여주체로서 뿐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접근방법의 가능성과 더불어 정치적 사고가 가능하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확인해 줌. 한편, 연구참여자 J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시민자산, 공유자산, 자산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가 놓치지 않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진술함

김문수 지사 때 보면 1000개 육성 다음 해에 또 천개 육성. 요건만 갖추면 지원해준다. (중략) 또 센터 만들지 말고 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상점이면 상점주고 시민단체 주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것으로 돈벌자가 아니라 기본소득, 기본인권으로 그런 구조로 만들고 하면 확산되지 않을까. <1차 FGI 연구참여자 B>

자산으로서 시민은 이것은 오히려 요즘 신빈곤, 평등 쪽에서 이것은 정말 임금하고 노동에 대한 기본임금제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은가. 문화론이나 도시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연대, 협력 후에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접근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참여의 주체로서 그것도 그런데 시민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들이 뭐냐면 어느정도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치적 사고도 가능하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본소득이라든지 일자리, 이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전면화 세우는 것 이게 나은게 아닌가. <1차 FGI 연구참여자 A>

3) 연구참여자 L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권력 지향 방식 말고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면 더 다양한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차 연구참여자 D>

- 한편, 연구참여자 A는 한국사회가 사회적경제의 과도기이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림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대함이 필요한 시기로 봄. 사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은 것은 97년 경제위기 이후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줌

사회적경제나 이러한 것이 불과 얼마 안되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짧은 그런 데 되게 완숙한 목표에 관점에서 보니까 혼란스럽고 약해 보이는데, 사회적경제도 보면 우리만큼 이렇게 빨리 자리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1차 FGI 연구참여자 A>

- 더불어 연구참여자 A는 앞으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지역밀착형)중심으로 확산될 때 서울시와 서울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인해 줌

특히 긍정적인 평가는 로컬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주도하기는 했지만 서로를 잘 벌려고 막 그래서 서울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에서 내려가면 서울권 무조건 되게 확산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디 하나가 잘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굉장히 빨리 따라해요. <1차 FGI 연구참여자 A>

-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 F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보상원리로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캐나다나 싱가포르의 사회적가치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함

(전략)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무언가 메커니즘이 전혀 없잖아요. 사회 속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돈으로 보상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명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중략) 사회적 가치가 보상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치를 예로 들자면 자선시장이나 기부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쪽에서 일정 활동으로 크레딧을 주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원을 조달해 주거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스왑치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선구매제를 통해 경제적 favor를 주려 했지만, 사실 그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가치가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일 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대로 환원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럼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환원시키는 구조로 만들것이나 제도적으로 경제 환경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것이나 이러한 제도 한 두 개 도입시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소**라든가 일각에서 논의한 그런 부분을 마치 주식시장처럼 SIB(social impact bond) 시장과 같은 것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보는데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켜주는 이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3차 FGI 연구참여자 F>

5) FGI 결과 정리

<표 5-1> FGI 내용 정리

주요질문	주요 내용
시민 및 시민경제	사회적경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깨어있고 교육받은 시민,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제
왜 시민경제인가?	한국 사회적경제의 문제에 대한 해결기제로,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시민주체 강조
확장가능성	경제활동 외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도 사회적경제로 인식되어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되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고려할 점	시민경제 사용의 혼란 및 기계적 결합에 대한 우려, 기본소득 시민자산화 등

2 • 시민경제 구체화와 실천적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

1) 시민경제 개념 정립과 연계되는 시민경제 주체 설정 기준

① 시민경제 주체 관련 개념적 논의

- ‘시민경제’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를 기존의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서 더욱 확장하여, 시민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민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나 경제조직까지 ‘시민경제’에 포함시키고자 함
- 사회적경제의 시민 중심성은 [시민주체, 일상체감, 지역기반]이라는 세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첫째, 시민주체. 이는 시민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측면임.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됨. 사회적경제 부문의 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이자 기업가이자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 즉, 사회적경제가 시민들과 연결되는 지점이 소득 창출과 관련된 고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일상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거나 시민들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도록 만드는 것까지 확대되는 것임. 요컨대, 시민들이 스스로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시민주체의 핵심임

- 둘째, 일상체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에서의 실천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광의의 사회적경제 내에 포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같이 살림 프로젝트’는 ‘내 일상을 내가 변화시킨다’는 기조 하에 진행되는 것임.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매개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 조직들까지 사회적경제의 포괄 범위에 포함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양한 일상 조직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두 지점이 해결되어야 함. ‘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와 ‘이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가 그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생력을 갖춘 우수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능해짐

- 셋째, 지역기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마을 단위, 동네 단위, 아파트 단지 단위와 같은 세부적인 지역 기반의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동의 성과를 지역기반의 시민경제 조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 예를 들어, 이탈리아 볼로냐 시에는 ‘social street’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골목이 있음. via Fondazza라는 이름의 이 골목 거리에서는, 한 주민이 같은 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든 후, 그 웹페이지 주소를 포스트잇에 써서 동네 주민들에게 공유함.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매개가 되어 같은 골목 거리 주민들 간의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가 골목 환경 정비나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거리 차원의 주민 축제가 열리기까지 함. 이는 social capital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되기도 함. 한국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인터넷 카페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되기도 함.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 간에 온라인 카

폐를 매개로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도 있음(송경재, 2002)⁴⁾

- 요컨대,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 영역에 더해, 다양한 시민주체가 일상체감의 영역에서 지역 기반의 공간으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

② 시민경제 사례 선택 기준 : 주체 조직, 생활 영역, 지역

- 국내외의 기존 사례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민경제’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개념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기준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즉, 사례 선택 기준으로 시민주체가 속한 ‘주체 조직’, 일상체감성과 관련된 ‘생활 영역’, 지역기반성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구현되어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물론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이들 조직이 모두 ‘경제 조직’으로서, 생산, 소비, 분배와 같은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이러한 경제 활동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임
- 첫째, 다양한 시민주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외에도, 다양한 ‘주체 조직’들이 포함됨.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주민 자치 활동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운동이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소비자와의 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관계 형성을 하며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공

4) 송경재(2002),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 高鳳論集, vol.31, pp. 177-202, 경희대학교 대학원 출간.

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차원의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NGO, NPO)나 복지법인 등이 시민경제의 주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이 중에서도 마을공동체나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개별 행위자로서 시민 혹은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들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반면 시민사회단체 혹은 복지법인 등은 이미 각 개체별로 완성된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일상체감과 관련된 ‘생활 영역’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산업분야 혹은 업종을 기준으로 조직들을 구분할 수 있음. 이 때 시민경제를 통해 시민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미디어를 통한 광고에 의해 ‘만들어진’ 욕구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욕구이거나 시민들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욕구들임. 구체적으로는, 돌봄, 교육, 보건의료와 같은 일상영역 서비스, 중고물품 재사용, 자원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의 환경 분야 산업, 지역순환 농업, 로컬푸드와 같은 먹거리 분야 산업, 금융, 기술 지원 등의 창업지원 분야를 들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생활밀착형 이슈는 본격적인 산업 활동을 통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기 전의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제기되는 성격을 지님. 이러한 이슈를 지역 구성원들이 소소하게 논의하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 가는 속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됨. 즉,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해 구성원들이 서로 활발하게 소소한 소통을 이어가고, 그 속에서 문제의식과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공유해야, 비로소 해결책이 수월하게 발견될 수 있음(공석기·임현진, 2020)⁵⁾

- 셋째, 지역기반성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구현되어 나타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로 마을 혹은 동네 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단지과 같이 각 개별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의 지역을 들 수 있음
- 다만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 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의 시민경제 개념에 대한 논의를 위한 참고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로 도시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 사례의 경우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의 도시로 구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경제 영역이 활성화된 유럽 혹은 일본과 같은 해외 사례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혹은 자치구 단위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취지를 감안할 때, 모든 산업분야나 업종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민경제’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개념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중 기존에 흔히 다루어져 왔던 사회적경제 주체가 아닌 그 외의 주체 조직(마을공동체,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자, 시민사회단체 혹은 복지법인 등)들이 주도하는 주요 사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난 다양한 지역 배경(국내 서울 및 수도권, 국내 수도권 외 지역, 해외 대도시, 해외 중소도시 혹은 자치구)에 따라 사례들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본 과제가 서울시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례는 주로 도시로 한정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할 ‘시민경제’ 관련 주요 사례들은 아래 표와

5) 공석기·임현진(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

같이 구분됨

[표 6-1] 시민경제 사례연구 조직 구분

지역 배경 주체 조직	국내 서울 및 수도권 도시	국내 수도권 외 도시	해외 사례
마을공동체	성대골마을 공릉꿈마을공동체	감천문화마을 성북 동행아파트	코인스트리트 오타가이사마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자	성남 주민신탁 안산의료신탁	대구 북성로	프랑스 (CAE, SMartFR)
시민사회단체 혹은 복지법인		대구 안심마을 강원도 원주시	독일 세나우 미국, 캐나다

2) 시민경제 개념 구체화를 위한 주요 사례와 시사점

① 마을공동체 관련 사례들

-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일부 국가들과 유사하게, 지역의 파괴된 마을공동체들을 재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주민 모임은 북 카페, 농가 레스토랑, 마을도서관, 공동주택 사업, 텃밭, 꾸러미 사업, 로컬푸드 매장, 생협 등과 연관됨(공석기·임현진, 2017)⁶⁾. 특히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활동은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삶이 느슨하게 결합되는 현상들을 촉진함. 이는 지역 주민들 간의 대화와 논쟁을 통한 자체적인 교육의 과정을 통해 가능해짐. 즉,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천의 장이 되기도 함(공석기·임현진, 2017).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지

6) 공석기·임현진(2017), 주민과 시민 사이 :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 활동 돌아보기, 진인진.

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러한 가치에 대한 동의는 구성원의 구체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를 통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음(공석기·임현진, 2017)

- 특히 오늘날 강조되는 마을공동체는 전통적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나 방향식의 인위적 지역공동체 형성이 아니라,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동체적 특징을 재발견하고 발굴하여 지속가능하게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삼는 마을을 의미함(공석기·임현진, 2020)
- 공석기·임현진(2020)이 제시하는 오늘날의 마을공동체는 풀뿌리 구성원이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들어가고 적응할 수 있는 ‘가벼운 공동체’를 의미하고, 이러한 가벼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끈기, 참여, 소통, 혁신, 협치를 들 수 있음. 즉, 마을은 가벼운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미시적 공간이고, 이러한 마을을 유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함
- 공석기·임현진(2020)이 제시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 중, ‘끈기’는 지역공동체의 복원력이나 회복력을 의미하고, 이는 소외된 사회 구성원이 주체로서 설 수 있게 돕는 교육의 힘과 그 힘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구조와 협력의 문화로부터 나올 수 있음. ‘참여’는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아래로부터 구상하고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지역주민 간의 관계 맺기를 의미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 중 누구든지 참여하여 주민들이 수평적으로 만나고 마을과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소통’은 마을 구성원이 설득과 타협을 통해 사

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통 역량은 어려서부터 이를 배우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회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음. ‘혁신’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할 때의 필수 요소로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선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녀야 하고, 이러한 혁신은 지역과 지역 구성원에 대한 높은 이해와 삶의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구성원들의 욕구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토대로 만들어짐. ‘협치’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선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과 운영방식을 동원하는 전략을 의미하고, 지역 주민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기획하는 활동과 조직 간의 연대와 협동을 토대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는 처음부터 사회적경제 조직과 같이 경제활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서 형성되지는 않음. 다만 주민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활동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등의 경험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 조직이 형성되기도 함
-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가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생태계를 구축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을 들 수 있음. 동네에 초등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렇게 2009년 설립된 마을 차원의 어린이 도서관이 거점이 되어 다양한 활동들이 발생함. 대표적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의 확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주민들이 마을도서관을 거점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영화 보기 모임을 개최하였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 절감 캠페인 등 ‘에너지 자립마을’과 관

련된 활동이 활성화됨. 이는 에너지 운동의 중심 조직인 마을기업 ‘마을
 닳살림 협동조합’과 그 운동의 거점 공간인 ‘에너지 슈퍼마켓’의 설립으
 로 이어짐. 즉,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캠페인을 넘어 에너지 관련 일
 자리를 만들고 그를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
 을 진행함(공석기·임현진, 2020; 박재동·김이준수, 2015⁷⁾;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2013⁸⁾)

- 이러한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은 더 나아가 지역 기반의 마을공동체, 사
 회적경제활동, 주거 환경관리와 같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
 원 사업과 결합되어 지역 공동체 내의 공동체적 역량을 높임. 그 결과
 성대골 마을 지역을 기반으로 공유주방, 공유작업실, 공유주택, 커뮤니
 티바 등을 운영하는 청년 소셜 벤처의 지역 내 공간 창출도 이어지고,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토대로 하는 주거 공간도 확충하고
 있으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텃밭 만들기과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의 다양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밀착형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활
 성화됨(공석기·임현진, 2020; 박재동·김이준수, 2015; 오마이뉴스 특별
 취재팀, 2013)
- 요컨대, 이러한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를 통
 해 제고된 마을의 공동체 역량이 주택, 경제, 먹을거리, 교육 등의 영역
 으로 확장되어 나간 데에는 주민 개개인들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추구
 하는 입장과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을 균형 있게 현실에 접목해
 나간 주민들의 노력이 크게 기여함(공석기·임현진, 2020; 박재동·김이
 준수, 2015;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2013)

7) 박재동, 김이준수(2015),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우리가 꿈꾸던 마을이 펼쳐지고 있다, 산
 티.

8)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2013), 마을의 귀환: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에 가다, 오마이
 북.

- 한편,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꿈마을공동체는 지역 주민을 주체로 세우기 위해 일종의 중간지원 조직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 사례임. 이 지역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이하 공터)를 거점으로 주민 간의 관계 맺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뿌리를 둔 성대골 마을과는 약간 다르게, 지자체인 노원구가 성공회대에 9년 동안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는 있음. 그러나 이 센터의 설립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욕구와 실천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체화된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게다가 지자체가 직접 주민 활동을 관리하기보다는, 관련 역량을 갖춘 대학 조직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관료화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공석기·임현진, 2020)
- ‘공터’는 공릉동 마을주민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열린 공간이자 중간지원조직임.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협력해 무언가를 추진할 때 공공의 자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방적으로 기획을 제시하거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지는 않음. 다만, ‘공터’는 다른 일반적인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와 같이 지역 주민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를 하는 주체로 보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냄. 즉, 공간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곳이 되도록 운영하면서 ‘공터’의 실적을 사업이나 모임을 만들어 낸 숫자로 평가하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터’의 역할을 주민에게 맡기고 주민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제한함. ‘공터’의 직원은 기본적으로는 사서, 청소년 지도자, 상담사,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 역할을 지니지만, 조직 내 부적으로는 서로 칸막이를 트고 협력하면서, 지역 차원에서는 주민들과 만나며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삼았음. 그 결과 주민들이 스스로 가지는 힘이 강화되고 마을 내의 활력이 활성화됨. 가

령, 청소년들이 공동체 내에서 작은 변화를 꿈꾸도록 돕는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을 참여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학생들의 부모와 가족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 더욱 다양한 주민모임이 생겨남.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겨나기도 함(공석기·임현진, 2020)

- 요컨대, 주민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자체적인 학습과 참여의 경험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 안에 주민들의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시민경제 조직의 확장을 이끌어낸 것임. 오늘날과 같이 시민들의 지역 간 이주가 잦은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은 하나의 지역 범주 내에 고정되어 축적되기는 어려움. 대신, 시민들이 한 지역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한 것들을 자원으로 삼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더라도 또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공석기·임현진, 2020)
- 반면, 마을만들기와 결합된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의 주체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사례도 있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은 사회적경제와 연결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됨. 공석기·임현진(2020)은 이 지역의 초기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주민, 예술가, 행정 관청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빈곤 가정이나 노인만이 남아 침체된 마을을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 설명함. 이 사업을 거치며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등장하였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기도 했음. 그러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수평적 거버넌스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다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짐(공석기·임현진, 2020). 전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아일랜드 발리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마을만들기의 관건은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도와, 주민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제기하고 다른 주체들과 소통하며 불만과 요구를 해소해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의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하지만 감천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주민을 주체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대하면서 불만과 요구를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함.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감천문화마을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기 시작하면서 개발 이익을 둘러싼 지역 내 균열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상점들이 경제적 수익을 중시하는 일반 개인 가게나 프랜차이즈로 대체되기도 함(공석기·임현진, 2020)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부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음. 지역 주민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논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해야만 지역공동체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음. 감천문화마을 사례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소통의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즉, 주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함께 자신들의 욕구와 관련하여 학습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가는 등의 토양이 뒷받침되어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음. 이러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마을만들기 활동가가 지역사회로 투입되어 주민들의 공론장을 만들고 주민들 간 혹은 주민들과 공공부문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활동가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음(공석기·임현진, 2020)

-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 강조되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조차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 하물며 사회적경제보다 더욱 확대된 개념인 ‘시민경제’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일상생활에 밀착되는 마을 단위의 지역에 주민들이 적극적 주체가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원칙이 자리 잡게 하려면 더욱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함.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도 내부적 소통과 민주주의 훈련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을 단위에서 소통과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긴 호흡을 가질 필요가 있음(공석기·임현진, 2020)

-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단위에서는 ‘마을’을 동네라는 공간적 범위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파트 단지’ 역시 일종의 마을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 성북구의 ‘동행(同幸) 아파트’ 사례를 검토할 수 있음(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편, 20199). 동행 아파트란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정 최저임금 100% 지급이 적용되면서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지자 그와 관련해 발생한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아파트 주민들 간의 민주적 논의 과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통해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을 일컬음. 성북구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을 석관두산아파트에서 최초로 시행함. 이러한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과정들이 관찰됨(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편, 2019)

- 아파트는 거주민들 간의 공동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

9)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편(2019), 시민정치 현장연구 참여·분석·제안, 푸른길.

이 일반적인 생각임. 하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도입된다면 아파트 공동체도 온전한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음.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발굴하고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여 그를 통해 상생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아파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에서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니는 민주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필요함. 이러한 신뢰는 참여의 포괄성, 숙의적 논의 과정,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함.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한 생활 밀착형 의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함. 이러한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사회적 자본은 주민들 간의 관계를 통한 관계 구축을 통해 축적될 수 있음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편, 2019)

- 요컨대, 일종의 유사 마을공동체로서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의 신뢰 쌓기-공동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과 효능감 증진’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편, 2019).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문제와 관련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일종의 경제 활동과 연결될 경우 사회적경제 개념의 확장으로서 ‘시민경제’ 개념이 현실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해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를 연결해서 추진한 영국 런던의 코인 스트리트 마을 만들기 사업 체임(니시야마 야스오 등 저, 김영훈 등 역, 2009¹⁰⁾). 영국 코인 스트리트

10) 니시야마 야스오, 니시야마 야에코 저, 김영훈, 김기수, 최광복 역(2009),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 사회적기업에 의한 도시 재생, 기문당.

트 마을 만들기 사업체는 선박 하역장, 창고, 공장이 밀집한 런던 템스강 남쪽의 도심인접지구에 위치함. 이 지역은 1960년대 해운업 등 이 지역에 기반을 두던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함께 쇠퇴함. 그 결과 이 지역의 주요 구성원인 미숙련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실업 심화와 지역 주민의 고령화에 따라 빈곤 문제가 심화됨. 동시에 민간 개발업체에 의한 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붐을 이룬 결과 지역 내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방식의 개발이 급증함. 이에 맞서 1970년대 중반부터 주민의 요구에 토대를 둔 지역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주민 주도의 재개발 사업체인 코인 스트리트 마을 만들기 사업체(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가 만들어짐. 이들은 토지를 취득한 후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외에도 녹지공원, 강변 산책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함(니시야마 야스오 등 저, 2009)

- 코인 스트리트 마을 만들기 사업체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들과 지역 내 시민단체 조직을 조직화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 지역 외부에 있는 단체 및 전문가와의 연계를 토대로 정치와 행정의 힘을 활용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체는 저소득층에게 시장가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낮은 집세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지역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삼는 방식의 주택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족 구성, 연령, 신체적 조건, 민족 등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주택의 관리 운영을 주민들이 담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자율적 관리가 자리 잡혀 있음(니시야마 야스오 등 저, 2009)

- 1990년대 이후 코인 스트리트 지역 인근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코인

스트리트 마을 만들기 사업체는 사업 운영의 방향을 전환함. 구체적으로는 주택지 개발 디자인의 질을 높여 시장경제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냄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함. 이에 대해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업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진행된 지역개발 사업이 본질적 목적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 영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입과 참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임 (니시야마 야스오 등 저, 2009)

- 한편, 눈에 보이는 형태의 지역재생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내 구성원들 간의 서로 돕기 시스템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 간의 연계망이 돈독해지고 이를 통한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에 토대를 둔 ‘지역 만들기’가 진행된 사례로 일본 생협 조합원들 간의 ‘오타가이사마’ 시스템을 들 수 있음(다나카 히데키 편저, 셰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 옮김, 2020)¹¹⁾. ‘오타가이사마’는 “일상생활 중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양쪽을 연결해 ‘일’을 해결해 주는 유료 시스템”임. 2002년 시마네현의 생협시마네 조합원들이 시작한 후 이 시스템은 2016년 기준 일본의 광역 자치단체 10곳에서 20개 조직이 참여하는 전국적 시스템이 됨(다나카 히데키 편저, 2020)
- 이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차원에서 의미를 지님. ‘오타가이사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는 고령자나 혼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자, 혹은 자녀 돌봄의 부담을 홀로 지는 한부모 가정 등이 많음. 고령자나 환자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11) 다나카 히데키 편저, 셰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 옮김(2020), 협동의 재발견 : 작은 협동의 발전과 협동조합의 미래, coopdream. 3장 ‘오타가이사마’ 활동과 지역 만들기.

제공하는 식으로 관계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데 비해, ‘오타가이사마’는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자를 돕는 지원자 간의 양방향 관계가 중시된다는 특성이 있음. 또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공식적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지만, ‘오타가이사마’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활동을 할 수 있음. 즉,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원자와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이용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그들 간의 상호 관계 맺기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구조가 ‘오타가이사마’의 핵심 특성임. 특히 이 시스템 내에서는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지원해 주는 일의 범주가 넓고 유연함.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용자와 지원자 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선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됨. 또한 ‘오타가이사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모두 서비스 이용자인 동시에 지원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를 존중하게 됨(다나카 히데키 편저, 2020)

- ‘오타가이사마’의 활동 방식은 그 시스템이 기반을 두고 있는 각 단위 생협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높여줌. 또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힘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함. 다나카 히데키 편저(2020)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북유럽과 유사하다고 평가함. 즉, “북유럽은 지역 과제를 직접 해결해 나간다는 의식이 강”하고, “이러한 국민 의식을 양성하는 장치로 학습 동아리가 있으며”, 북유럽 시민 “두 명 중 한 명이” 학습 동아리에 참여함. 또한 “새로운 학습 동아리를 만들 때는 생협과 노동조합이 함께 새로운 자발적 조직을 세우는 식으로” 자기 증식을 해 나감. 이처럼 지역 내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가 강한 곳에서는 행정 기관의 역할이 지역 주민들을 확실히 믿는 것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음.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행정 기관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지원

금을 주는 하향식의 방식이 강하게 나타남(다나카 히데키 편저, 2020)

- 요컨대, 일본 생협의 ‘오타가이사마’ 시스템은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고 그를 통해 지역 내 문제 해결 꾀하는 지역 자체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에 필수적인, 지역 구성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②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자 관련 사례들

-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를 기존 사회적경제 개념의 해체 및 재구성을 위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시민경제’ 내 주요한 주체로서 고려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소비자와의 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토대로 시장 거래를 하는 측면이 강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여부가 이들의 생존에도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여타 일반적인 시장 내 행위자인 대기업과는 차별성을 지님
-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에 대해 이론화를 시도한 Defourny, Nyssens, and Brolis(2020)¹²⁾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을 세분화할 때 고려하는 주요한 조직들의 유형 중 하나로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를 포함시키고, 이러한 중소 사업체들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간 균형을 추구하고 이들 목적을 통합시키려는 지향성을 가진다고 언급함

12) Defourny, Nyssens, and Brolis(2020), Testing Social Enterprise Models Across the World: Evide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ocial Enterprise Models (ICSEM) Projec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pp. 1-21.

- ‘사회적경제’ 개념의 확장된 형태이자 기존 사회적경제 개념이 지니는 사업체 혹은 개별 사회적기업가 중심의 지원 방식이라는 한계를 넘는 개념인 ‘시민경제’ 개념에서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놓여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시민경제 내에서의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위치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봄. 첫째로는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예: 신협, 의료사협)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내에서 하위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성남시의 주민신협이나 안산시의 안산의료사협이 추구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그 사례임. 둘째로는 새로운 사회혁신 활동이나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기반이자 동등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터를 그 예라고 볼 수 있음

- 경기도 성남시의 주민신협은 성남시의 원도심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한살림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외의 다양한 민간 조직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민민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공석기·임현진, 2017; 공석기·임현진, 2020). 초창기 주민신협은 주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나, 신협의 성장을 위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1992년부터 지역 내 중앙시장과 현대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함. 주민신협은 시장과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임. 그 결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적금을 1995년부터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차츰 시장 상인들의 신뢰를 얻음. 특히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발생한 중앙시장의 대형 화재 이

후 복구 과정에서 주민신탁이 시장 상인의 자활을 위한 대출을 신용 보증 없이 최저금리로 해 주면서 지역공동체 내 금융활동의 구심점으로 성장하게 됨.

- 즉, 성남 주민신탁은 금융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공석가·임현진, 2017). 즉, 성남 주민신탁은 시장 내 소상공인들을 포괄하는 금융 분야의 경제운동에서 더욱 확장하여 교육공동체와 생활공동체 활동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끈기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주민신탁 건물 1층에 있는 나눔 카페는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되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6층 옥상도 웨딩 장소나 주민과 함께 하는 영화 관람 장소로 사용됨(공석가·임현진, 2020)
- 경기도 안산시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산의료사협)은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공석가·임현진, 2017). 근래의 경험으로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 그리고 동네 기반으로 주민들과 대면 관계를 맺고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함.
- 안산의료사협 자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안산의료사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65 노인건강복지돌봄네트워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사업의 시초 격인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건강 돌봄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대면 거래를 하는 소상공인 중 일부도 그 체계에 포함됨.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건강 돌봄사업을 위해, 안산의료사협이 주도하여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예: 도시락 사업을 진행하는 자활기업)이나 사회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역할을 분담하였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내 민간자원들이 연계되어 안전, 이동지원, 식사배달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게 됨. 이러한 체계 내에 지역 내 노인들과 일상적으로 대면 거래를 하는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판매 소상공인들도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챙기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포함됨¹³⁾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에 위치한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터’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수제화 제조, 부품 공급, 도소매업과 같은 산업 전통을 접목해 도시 내 지역재생을 추진한 사례이자 그 결과물임. 전충훈(2020)¹⁴⁾에 의하면, 대구 북성로 지역은 한국 전쟁 이후 다양한 부품과 공구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들과 업체들이 모인 일종의 기술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인근에 공단이 생기면서 기술자들이 빠져나간 후에는 공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밀집한 거리가 됨.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구상이 문을 닫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대구 도심이 북성로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쇠퇴가 가속화됨
-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지역 문화활동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스페이스 우리’가 문을 연 이후, 북성로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이 공간을 거점으로 모이고 상호 작용을 하게 됨. 특히 이러한 활동가들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북성로 지역의 기술생태계 구성원들과도 상호 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혁신적 활동에 대

1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2880> 참고.

14) 전충훈(2020), 북성로 시간과 공간의 재생 그리고 사람 :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터, 새로운 사회를여는연구원 기획(2020), 슬기로운 뉴로컬생활, pp. 334-359.

한 영감을 만들어내게 됨. 이러한 활동들이 동력이 되어 2011년 (사)시간과공간연구소가 ‘북성로의 재발견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 이는 북성로 지역에 존재하던 100여년에 걸친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행정적 지원 없이 민간인들이 모여 진행한 사업이었음. 이후에 이러한 활동들이 활성화되면서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공구박물관이 만들어졌고, 대구 중구청을 통해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기금이 지원되어 북성로 리노베이션 사업이 진행됨. 이 사업에 관심을 지닌 (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2012년부터 지역재생을 통해 형성된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시행함. 이것이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음. 2014년 클러스터 형성이 본격화되어 2016년 30여 개의 소셜 벤처가 입주했고, 2020년 기준으로 15개가 사업을 지속함. 2016년에는 (사)시간과공간연구소가 북성로 기술생태계 주민 협업공모전 ‘메이드인 북성로’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는 북성로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 내 기술자와 협업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만 제시한 채,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을 둔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업체들 간의 창의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됨. 그 결과 북성로를 대표하는 굿즈로 떠오르게 된 공구 모양의 ‘북성로 공구방’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적 시도들이 활성화되기도 함(전충훈, 2020)

- 요컨대, 대구 북성로 지역 내의 산업 기반을 이끌어온 소상공인이나 기술자들과 연계된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 내에 새롭게 유입된 사회혁신가들이 지역 내의 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사회적경제 활동을 추진하는 시도가 결합되어, 대구 북성로 지역 내에 소셜 벤처와 사회적기업이 집적화되는 일종의 사회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 것임. 대구 북성로 지역의 사회혁신 클러스터가 지닌 핵심 특성은 지역 내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해 왔던 기술자들을 비롯한 지역의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 기반을

도시재생 및 소셜벤처들의 새로운 활동 및 콘텐츠 생산과 연계했다는 점임. 북성로 클러스터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학습관광지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갖추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혁신의 실험을 시도하는 거대한 리빙랩으로 나아가고자 함(전충훈, 2020).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민경제 개념과 관련해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터가 제기하는 시사점은 구체적인 지역 공간을 토대로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도시재생이나 소셜벤처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시도의 주요한 주체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임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조직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연계된 해외 사례로서는 프랑스의 사업고용협동조합(CAE)이나 프랑스의 문화예술 행정서비스 공익협동조합인 SMartFR(스마트)을 들 수 있음¹⁵⁾
- CAE는 노동자협동조합의 독특한 협동조합 모델로 1995년에 등장하였고, 2014년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법 제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됨. 이 CAE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고용하여 집단적 방식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협동조합임. 이들은 사업자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대신해 조합 명의로 법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함. 이에 속한 구성원들은 직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지닐 수 있으면서, 피고용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 한편, 스마트는 지식경제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대행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협동조합임. 1998년 벨기에에서 SMartBe라는 문화예술가협회 형

15)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5.9.8.), 프랑스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 : 사업고용협동조합과 체인형사업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15 프랑스 협동조합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자료 참고.

식의 조직이 만들어졌고, 2006년 프랑스 문화분야 종사자들이 벨기에 조직을 만난 후 이 조직 형태를 프랑스로 갖고 와 2008년 SMartFR이 설립됨(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 이들 두 조직은 모두 위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에서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시민경제 간의 연결고리와 연관 있는 조직이라 보기는 어려움. 다만, 개별화 되어 있는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들을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을 통해 연대시키고 그를 통해 사회안전망과 연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해지는 지위를 갖게 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음.

③ 시민사회단체 혹은 복지법인 등 관련 사례들

-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과정에서도 이미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함. 양세훈(2012)¹⁶⁾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인건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내부 동력을 끌어 올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 창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였음. 양세훈(2012)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성과를 내고자 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같은 시민 참여형 사업에는 열정, 자발성, 적극성을 가진 그룹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 개별 시민들은 결집력을 보이기 어려워, 결국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다고 설명함

16) 양세훈(2012),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이담Books, 5장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 마을기업은 초창기에 지역에 토대를 둔 자생단체가 중심이 되었고,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게 됨.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2009년까지 주로 기존에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다양한 복지 관련 단체의 참여가 많았음. 양세훈(2012: 217)에서는 ‘복지 관련 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초창기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환한 사회적기업이 많았음. 오단이(2012)¹⁷⁾에서 다룬, 사회복지영역에서 전환한 초창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를 지님.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례, 의료소비자협동조합, 기업 설립 후 오랫동안 장애인을 다수 고용해 왔던 장애인 재활 작업장,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해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한 복지 관련 사단법인으로부터 분리된 조직 등이 그것임. 이후 사회적기업 확대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가 더욱 늘어남(양세훈, 2012)
-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에 기존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와는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양세훈, 20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주민의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대안도 동시에 제시됨. 한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각 부처 간 성과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준비 단계인 교육과 이념적 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토대가 약화되기도 함. 이러한 현상을 문제로 규정하면서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나타난 일련의 사회적기업가들이 있었음. 이들은 시

17) 오단이(2012), 한국 사회적기업의 형성 및 성장과정 연구 : 사회복지영역에서 전환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의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시행하는 시민기업가라 일컬어짐(양세훈, 2012)

- 다시 정리하면, 시민사회단체가 우리나라의 초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기반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즉,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일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일컬어지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양세훈(2012)은 이를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보자는 아름다운 상상을 모으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표현함.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향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연계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동구의 안심마을 지역은 장애인 운동이 사회적경제 활동과 연계된 사례임. 이 지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라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초기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었던 곳임. 이후 아파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도시 텃밭과 같은 사업이 새로 등장함. 대구 지역은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토대로 하는 사회 운동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성과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연계 세력이 됨(공석기·임현진, 2017)
- 대구 동구 안심마을 지역에는 다양한 주민모임이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있고, 이들 모임이 사회적경제 활동과 연계되면서 교육, 복지, 경제와 관련된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됨.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추

진하는 도심형 텃밭 활용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고용을 통한 도시락 사업, 안심협동조합이 진행하는 협동 및 먹을거리 교육을 통한 공동체 사업과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주택협동조합 공터와 연계된 발달장애 청년 교육 및 취업 지원과 같은 활동들이 이루어짐. 이는 모두 지역 내의 오래된 역사와 시민들의 욕구에 토대를 둔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임. 특히 안심마을 지역은 발달장애인이 도시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의 노력들을 토대로 거주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생활형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었다는 특성을 지님. 처음에는 마을도서관인 ‘아띠 도서관’ 설립을 통해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협동의 경험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후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공동체 설립으로까지 이어진 것임(공석기·임현진, 2017)

- 대구 동구 안심마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장애인 복지운동 전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음. 예를 들어, 안심마을이 위치한 대구 동구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에서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는 조직들보다는 그 외부에 존재하는 단체들이 더욱 많고 그 이유로 지역 내에서 협동의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것이 지적되기도 함.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운동의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도시형 공동체 활동과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으로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공석기·임현진, 2017)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관에서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소수의 엘리트 활동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 벗어나, 지

역 단위의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위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즉, 지역 공동체를 토대로 하는 초기의 성공경험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부 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된 활동이 지역 내 시민 일반으로 확대되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됨(공석기·임현진, 2017)

-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협동조합사회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역 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발달한 협동조합 조직들 간의 연계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동 전반에 강하게 자리잡음(공석기·임현진, 2017). 원주 지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아래로부터의 협동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 이로 인해 협동 정신과 운영원리가 기저에 존재함. 2017년을 기준으로 원주시 지역에 등록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합쳐 67개이고, 이 조합들은 법인이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조직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각 협동조합이나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민들의 필요와 염원을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임. 즉, 원주협동조합사회경제네트워크는 주민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들 간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자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음.

- 특히 원주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교훈 중 하나는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시작이 관이 아니라 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도권을 갖는 역할을 민간 조직이 주도적

으로 수행해야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음(공석기·임현진, 2017).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적 욕구들을 종합적으로 충족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위치한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이종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공석기·임현진, 2017)

- 한편, 외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연계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내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음. 아래에서는 외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간의 연계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앞에서 시민경제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를 다루면서 성대골마을의 주요 활동이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와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 확대에 반대하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사회운동이 지역 내의 대안적 재생에너지 기반 형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들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음.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것이 독일임(이필렬, 2001¹⁸⁾). 독일에서 진행되어 온 에너지 전환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큼. 이러한 단체들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시작함. 처음에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후,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
- 그 중에서도 ‘셰나우 에너지 이니셔티브’는 독일에서 이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짐. 독일 남부에 위치한 인구 2500명의 작은 마을인 셰나우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후 ‘원자력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18) 이필렬(2001), 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찾아서, 궁리.

들'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고, 이 단체는 마을 단위의 전기절약운동과 체르노빌의 피폭 아동을 초청해 돌보는 일부터 시작함. 그 과정에서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형 전기회사가 마을의 전기를 독점 판매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눈뜬 회원들은 분산적이고 효율적인 소형 열병합발전기 보급 운동을 시작해서 전기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기 시작했고, 마을의 소수력발전 시설도 재가동시킴. 이로부터 더 나아가 스스로 전기회사를 설립하여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항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기에 이름.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전기회사의 방해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단체가 승리하였고 전력 시장 자유화 이후에는 자유화된 시장에서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판매하기도 함(이필렬, 2001)

- 에너지 문제 못지않게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필요한 영역이 교육 영역임. 이와 관련해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에서는 마을 교육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것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김용련, 2019¹⁹). 즉,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나 지역사회에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아이와 성인을 위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 운동이 외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바 있음.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 실천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은 도시 산업화에 따라 나타난 공동체 의식 약화와 개인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 나타난 것임.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 법령에 의하면 지역 내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정을 만들어 지역사회 내 공립

19) 김용련(2019), 마을교육공동체 : 생태적 의미와 실천, 살림터.

초중등학교의 변화를 돕는 것이 허용됨.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와 외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학부모의 학교 교육 관련 활동 참여, 학생들을 위한 지역 기반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과 협력함.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 스쿨인 Polk Bros. 재단의 활동을 기반으로 시카고 지역 내 기업과 자선단체들이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커뮤니티 스쿨 이니셔티브’라는 교육혁신 활동임(김용련, 2019)

- 캐나다에는 소외 계층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가 있음.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1970년대부터 민간주도형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옴. 이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차원의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도심의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나 이민자 등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대표적인 예로 Glen Cairn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를 들 수 있음. 이는 미국 커뮤니티스쿨 사례와는 달리 공립학교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자체적인 방식으로 지역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시 차원의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민·관·학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꾀하고 있음(김용련, 2019)

④ 사례연구에 대한 소결

- 본 절에서는 시민경제의 주체 유형 별 다양한 기존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민경제’ 개념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경제’ 개념이 향후 기존 ‘사회적경제’ 개념이나 관련 현상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고자 했음

- ‘시민경제’의 개념을 기존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때, ‘시민경제’의 틀 내에는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조직이나 활동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맥아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음. 즉,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상호 네트워크 조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들 외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롯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움직임들도 기존 사회적경제 개념을 확장하는 시민경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각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핵심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6-2] 시민경제 사례연구 사례 별 핵심 특성 키워드

사례 조직 유형	사례연구 선정사례	핵심 특성 키워드
마을공동체	성대골마을	주민들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현실 사업에 균형 있게 적용. 마을 공동체 역량이 제고되고 사업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확장됨.
	공릉 꿈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화로 연결되어 거점 조직 형성. 이는 주민을 능동적 주체로 보고 주민역량 강화 추진. 다양한 주민모임과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형성.
	감천문화마을	대표적 도시재생 사업 사례. 그러나 주민 의견 반영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미비해 주민 불만 커짐.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국한해 문제.
	성북 동행아파트	아파트 마을공동체 강화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 신뢰 쌓기가 필수적.

사례 조직 유형	사례연구 선정사례	핵심 특성 키워드
		이를 토대로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참여 위한 동기부여, 결과로서 문제 해결과 효능감 증진이 필요.
	런던 코인 스트리트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과 지역 내 조직들을 조직화한 토대 위에, 전문가와 정치, 행정의 힘을 결합하는 과정 필요. 상업화 우려 극복 위해 주민의 민주적 개입 필요.
	일본 오타가이사마	서비스 이용자와 지원자 간의 동등한 양방향 관계가 핵심.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가 구축되어 연대감이 강화되고 지역 역량이 강화됨.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자	성남 주민신탁	신탁 사업의 주요 고객으로서의 소상공인. 신탁이 금융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그를 토대로 교육 및 생활 공동체 사업으로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초창기 핵심적인 고객 집단 역할 수행.
	안산의료신탁	안산의료신탁이 추구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 내 주요 하위 행위자 중 하나로서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과 대면 거래를 하면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챙기는 역할 자발적 수행.
	대구 북성로	새로운 사회혁신 활동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기반이자 지역 내 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소상공인. 밀집된 소상공인은 그 자체로 지역 특성을 만드는 자원이 될 수 있음.
	프랑스 CAE, SMartFR	개별화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를 협동조합 형태로 연대시키고 사회안전망

<div>사례</div> <div>조직 유형</div>	사례연구 선정사례	핵심 특성 키워드
		과 연결하는 사례. 코로나19 이후 더욱 불안정해지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 사례.
시민사회단체 혹은 복지법인	대구 안심마을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 내 운동이 사회적경제 활동과 연계됨. 이것이 더욱 확장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협동의 문화가 자리잡는 것과, 폭넓은 지역 내 시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공동체 기반을 확장하는 것 필요함.
	강원도 원주시	지역 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발달한 협동조합 조직들 간 연계가 강하게 나타남. 주도권을 관이 아닌 민간조직이 지녀야 건강한 사회적경제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음.
	독일 세나우	독일 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 주민들 간 공감대 위에서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자본의 독점적 에너지 판매에 저항하며 대안적 체계 형성.
	미국, 캐나다 교육공동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노력, 지역사회 내 교육 플랫폼 구축 토대로 교육 활동 수행.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 간 협력 강화, 다양한 교육 및 사회 서비스를 지역 기반으로 아동들에게 제공.

6

결론

-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적경제를 ‘시민’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에 대한 확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시민사회론관점에서 시민은 1968년 서유럽의 5월혁명 이후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의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고 오늘날 시민주권시대에서는 시민사회의 주체로 여겨졌다²⁰⁾(이형용, 박상필, 2021).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 “시민없는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정부정책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제도적 동형화를 보임(오단이, 2013). 즉, 한국 사회적경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양적 확대 전략을 취함으로 사회적경제의 본질(공동체 지향, 연대, 협력)보다는 지원을 바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양산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경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는 폴라니(1944)가 거대한 전환에서 사회가 경제에 포섭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주장과 일맥상통함

20) 이형용, 박상필(2021)은 이 때의 시민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시민이 아니라 특수한 시민을 의미하고 규범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시민은 자유주의적 관점뿐 아니라 공화주의적 관점이 내포되어 시민이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에 만족하거나 사적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제도의 원리와 운영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 또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 반해 개념을 정의하다 보니 사회를 강조하게 되어 그 안의 주체에 대한 논의도 부진했으며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법적(혹은 지침)으로 구분되어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배제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함
- 즉, 작금의 사회는 경제에 포섭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²¹⁾ 전술했듯이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경제라고 부르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도 나타나므로 다시 경제를 사회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경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임
- 시민경제 전통은 인간의 사회성과 호혜성을 중요시하며, 관계에 기반한 삶의 전통을 계승하고 경제와 공동체 사이의 연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시민중심이 되는 경제, 좋은 시민을 만들어내는 경제로 정의됨. 이에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생활문제)기반의 시민에 의한(by citizen), 시민을 위한(for citizen) 경제로 정의되며**, 시민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함께 살맛 나는 더 나은 공동체를 통해 공동선을 이루어야 함. 따라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영역(돌봄, 교육, 주거 등)에서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화되어 시장경제와 구분되어 사회적경제 제도권 내 조직 외에 마을공동체, 소상공인 등의 여러 주체를 포함됨
- 즉 사회적경제는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조직이나 활동뿐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맥아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

21) 필자의 표현으로는 경제라는 아들이 사회라는 아버지를 잡아 먹었다고 한다.

동을 하면서 상호 네트워크 조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꾀하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롯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움직임들도 기존 사회적경제 개념을 확장하는 시민경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와 확장 속에서 시민 주도성을 담고 있으며, 지역경제(소상공인, 개인사업자²²⁾) 혹은 골목경제에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생산, 소비, 교환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자면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할 때는 확장된 의미에서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구현하되, 지역화를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시민(관계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여야 함
- 사회적경제의 시민주도성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적으로도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은 **창업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가 담은 시민교육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의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교과목이 개설되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지향적이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야 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은 개별 조직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식 협업사업**을 늘려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연스럽게 연대와 협력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2) 특히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분류되기도 하지만 많은 자활기업이 개인사업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에 대한 확장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지역화 전략을 위해서는 지역순환 경제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생활 속에 시민들이 필요(needs)와 관계(relationship)를 채울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동생산과 소비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 따라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회적경제에 무관심한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와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일상성(日常性)을 높여야 함
- 마지막으로 공동체지향, 연대와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작동되지 않았지만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 개념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운영원리가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연구결과에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확산에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기본소득과 지역자산화²³⁾ 부분이 부각 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사회적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23) 지역자산화 논의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고 사회적경제영역에서는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 공석기, 임현진(2017). “주민과 시민 사이 :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 활동
툫아보기, 진인진.”
- 공석기, 임현진(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
진.”
- 김자옥, 임세은, 신승희(2020).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배우는 청소년의
경제시민성 효과: 사회적경제 봉사학습 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김정원(2013). “사회적경제와 국가: 한국의 흐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적
경제리뷰』, 2, 34-47.
- 김용련(2019). “마을교육공동체 : 생태적 의미와 실천.” 살림터.
- 김홍식(2012). 브로델이 들려주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히드라 이야기.
김홍식 옮김(2012).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히드라 이야기. 갈라파고스.
- 니시아마 야스오, 니시아마 야에코 저, 김영훈, 김기수, 최광복 역(2009). “영국
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 사회적기업에 의한 도시 재생.” 기문당.
- 남승연(2016).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성남시 정책사례를 중심으
로.” 공공사회연구, 6(4), 47-75.
- 노대명, 이선우, 오단이, 김솔휘, 김민지(2017).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
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나가 히데키 편저, 세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 옮김(2020). “협동의 재발견 : 작
은 협동의 발전과 협동조합의 미래, coopdream. 3장 ‘오타가이사마’ 활동
과 지역 만들기.”
- 박상필(2003).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 권혁태 외,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아르케.
- 박세일(2015). “열린연단 강연: 오늘을 성찰하는 고전읽기: 애덤 스미스”

- 박선영, 목광수, 김승환, 성신형(2020). “시민성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 분석과 기독교사회윤리적 답변.” 기독교사회윤리 제48집 pp. 63-105.
- 박재동, 김이준수(2015),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 우리가 꿈꾸던 마을이 펼쳐지고 있다.” 산티.
- 법제처(2020). <http://www.law.go.kr/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법제처(2021). <http://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제처(2021). <http://www.law.go.kr/법령/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법제처(2021). <http://www.law.go.kr/법령/산림조합법>.
- 법제처(2021). <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법제처(2021). <http://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
-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편(2019). “시민정치 현장연구 참여·분석·제안.” 푸른길.
- 서울시(2019).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2020).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5개년 액션플랜 : 서울 시민경제 정책 제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5). “프랑스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 : 사업고용협동조합과 체인형사업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15 프랑스 협동조합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자료 참고.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신명호(2013). “사회적경제와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적경제리뷰, 2, 8-32.
- 신명호(2016).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김신양·신명호·김기섭·김정원·황덕순·박승옥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경기도: 한올아카데미, 49-103.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정책연구원.
- 양세훈(2012).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이담Books, 5장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 오단이(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형성 및 성장과정 연구: 사회복지영역에서 전환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오단이(2013).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 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285-311.
- 오단이, 김정선, 하태선(2017).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국제개발영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7, 79-110.
-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2013). “마을의 귀환 :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에 가다.” 오마이북.
- 이병천(2017). 옮긴이 해제. 이병천·나익주 옮김(2017). 인간의 살림살이. 후마니타스.
- 이종일(2018). “사회변동과 시민성 논쟁.” 사회과교육연구, 25, 1-19.
- 이창기(2001).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이형용, 박상필(2021). “거버넌스 교육론.” 도서출판 휴머니즘.
- 이필렬(2001). “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찾아서.” 궁리.
- 임혁배, 김윤태, 김철주, 박찬웅, 고희민(2007).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모색.” 서울: 송정문화사.
- 장원봉(2011).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생협평론 4호. pp. 20-31.
- 전충훈(2020). 북성로 시간과 공간의 재생 그리고 사람 :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기획(2020), 슬기로운 뉴로컬생활, pp. 334-359.
- 조우석(2011). “사회적경제 이야기 (2)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현재적 의의.”
- 주성수(2017).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임팩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 김현옥, 안승화, 천희, 김이경(2013).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장을 위한 상생모델개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주요섭(2010). “호혜경제의 담론과 실천” (미간행).
- 최용석, 백보현(2020). “사회적 혁신 기반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 벤처

- 창업연구 15(3). pp. 1-17
- 최준규(2020).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경기도인재개발원 발표자료 2020.06.18.
- 최준규(2018). “사회혁신의 새로운 기반, 제4섹터.”
- 홍경준(2013). “달린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 연복지의 후퇴와 그 대안적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65(2), 179-201.
- Acemoglu, D. and James A. Robinson. (2019). “The Narrow Corridor: States, Society, and the Fate of Liberty.” Penguin Press.
- Braudel, F. (1985). *La Dynamique du Capitalism*. 김홍식 옮김 (2012).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히드라 이야기*. 갈라파고스.
- Bruni, L. (2012). “The Genesis and Ethos of Market.” Palgrave macmillan.
- Dale, G. (2015). “Karl Polanyi: A Life on the Left.”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fourny, J. (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1-28,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edited by Borzaga, C. and Defourny, J. London: Routledge.
- Defourny, Nyssens, and Brolis(2020), *Testing Social Enterprise Models Across the World: Evide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ocial Enterprise Models (ICSEM) Projec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pp. 1-21.
- Graeber, D. (2001). *Toward an anthropological theory of value*.
- 서정은 (2009).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그린비.

- Hann, C. and K. Hart. (2011). *Economic Anthropology: History, Ethnography, Critique*. Polity Press. 홍기빈 옮김(2016). *경제인류학 특강*. 삼천리.
- Howaldt J., Schwarz M. (2010). *Soziale Innovation - Konzepte, Forschungsfelder und -perspektiven*. In: Howaldt J., Jacobsen H. (eds) *Soziale Innovatio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https://doi.org/10.1007/978-3-531-92469-4_5
- Jacobs, J. (1992). "Systems of Survival: A Dialogue on the Moral Foundations of Commerce and Politics." Vintage Books.
- Kania, J. and Kramer, M. (2011). "Collective Impac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Winter 2011.
- Lipietz, A.(2001). "Pour le tiers secteur.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pourquoi et comment."
- Liu, E. and Nick Hanauer. (2011). *The Gardens of Democracy: A New American Story of Citizenship, the Economy, and the Role of Government*. Sasquatch Books. 김문주 옮김 (2017). *민주주의의 정원: 좌우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시민 교과서*. 웅진지식하우스.
- Mauss, M. (1925). *Essai sur le don: Forme et raison de l'echange dans les societes archaiques*. 이상률 옮김 (2002). *증여론*. 한길사.
- Meadows, D. (1972). *Die Grenzen des Wachstums*. Bericht des Club of Rome zur Lage der Menschheit,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Pestoff, V. (2004). The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social economy in Sweden. *The third sector in Europe*, 63-82.
-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홍기빈 옮김

-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 Polanyi, K. (1977). *The Livelihood of Man*. edited by Harry W. Pearson. Academic Press. 이병천·나익주 옮김(2017). *인간의 살림살이*. 후마니타스.
- Rajan, R. (2019). "The Third Pillar: How Markets and the State Leave the Community Behind." Penguin Press.
- Smith, A. (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박세일·민경국 옮김 (2009).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 옮김 (2009). *국부론*. 비봉출판사.
- Zamagni, S. (2009). *Avarizia*. 윤종국 옮김 (2014).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 북돋움.
- Zamagni, S. and Luigino Bruni. (2004). *Economia civile*. 제현주 옮김 (2015).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북돋움

인터넷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491&cid=47336&categoryId=47336>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 확산 기초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조주연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전화	82-(0)2-353-3553
팩스	82-(0)2-38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www.sehub.net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으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93330



9 791197 346293
ISBN 979-11-973462-9-3